

정책참고자료

2016-15호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759명 수상구조대 배치	4
2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상반기 부패신고 보상금 12억8천여만원 지급	8
3	기획재정부	
	제목: 예타통과된 철도 SOC 사업에 대한 신속한 재정지원	12
4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13
5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대학 ICT연구센터 선정	48
6	문화체육관광부	
	당신의 아이디어가 평창문화올림픽을 만듭니다	52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전적응 훈련 점검	56
7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15개 시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본격 추진	58
	여름 휴가철 이전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추진	63

8 환경부

7월8일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 ————— 66

9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만들기 4가지 공동캠페인 추진 ————— 67

10 여성가족부

“남녀가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행복과 기업성장” ————— 83

11 국토교통부

공약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본격 추진 ————— 95

유라시아 교통·물류, 한국에서 만나다 ————— 99

12 해양수산부

농수산식품 창업 스타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시작 ————— 103

1-1

국민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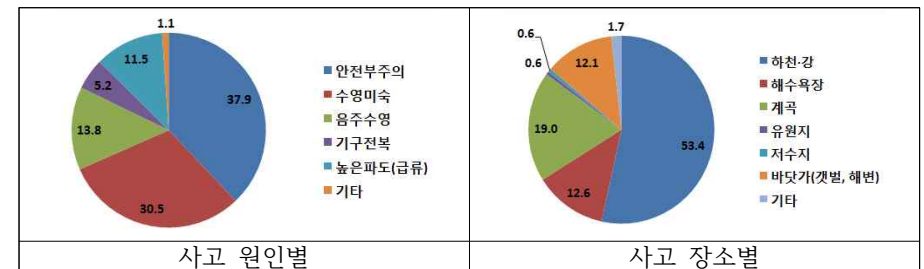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759명 수상구조대 배치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해수욕장, 계곡 등을 찾는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 올해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전국 물놀이 장소 320개소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 8,759명이 배치되어 인명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한 홍보, 안전계도, 생활안전 교육 등을 펼친다.

○ 최근 5년간 연평균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는 35명으로 안전수칙 불이행이 전체의 37.9%로 1위를 하였으며, 수영미숙 30.5%, 음주수영 13.8%를 차지하여, 무엇보다도 안전수칙 준수가 각별히 요구된다.

○ 사고 장소로는 유역이 길고 수심이 일정치 않은 하천·강에서 53.4%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계곡 19.0%, 해수욕장 12.6% 순으로 나타났다.



□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470개소에 9,529명의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여 1,971명을 구조하고 123,330건의 안전조치를 통하여 여름철 수난사고 인명피해 경감에 기여하였다.

- 올해에도 주요 장소에는 ‘안전체험장’을 설치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119구급대를 전진배치하여 사고발생부터 병원까지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국민안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놀이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음주수영은 반드시 삼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1 2016년 민관합동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여름철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의 인명피해 방지 등 수난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민관합동의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1 운영계획

- 기 간 : '16. 6. 1. ~ 8. 31.(물놀이 장소 여건에 따라 운영기간 결정)
- 장 소 : 320개소 (해수욕장, 내수면 등 물놀이 장소, 소방서장 선정)
 - 사고빈발 장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배치로 소방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고정근무 위주로 내실 있는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 ※ 근무형태 : 고정근무 223개소, 순찰 97개소('15년 고정 201, 순찰 285)

< 배치장소 운영계획(안) >

구 분	계	해수욕장	강	저수지	하천	계곡	호수 등
2016년	320개소	112	62	10	85	43	8

- 인 원 : 8,759명 (소방공무원 2,872명, 민간자원봉사자 5,887명)
 - 소방서별 여건을 고려, 물놀이 장소의 규모 등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인력 배치·운영
- 주요임무 : 물놀이 장소에서의 유사 시 인명구조 및 위험제거 활동
 - 수상·수중 인명구조,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수변 예찰활동
 -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미아 찾기, 이용객 편의제공 등
 - 피서객 대상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심폐소생술 교육 등

2 최근 3년('13~ '15년) 운영성과

구 분	배치장소 (개소)	배치인원 (명)	활동실적	
			인명구조(명)	안전조치(건)
'13년	465	8,935	2,799	221,662
'14년	460	9,783	1,300	69,632
'15년	486	9,871	1,815	78,696
3년 연평균	470	9,530	1,971	123,330

※'15년은 '14년 대비 구조인원 515(40%) 증가, 안전조치 9,064건(13%) 증가

참고 2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 통계현황

○ 원인별(단위 : 명)

구 분	계	안전부주의	수영미숙	음주수영	기구전복	높은파도 (급류)	기타
2015년	36	6	10	9	2	7	2
2014년	24	6	12	3	0	3	0
2013년	37	15	12	2	4	4	0
2012년	25	14	7	2	1	1	0
2011년	52	25	12	8	2	5	0
평균	34.8	13.2	10.6	4.8	1.8	4.0	0.4

○ 장소별(단위 : 명)

구 분	계	하천·강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	저수지	바닷가 (갯벌, 해변)	기타
2015년	36	21	4	6	1	0	4	0
2014년	24	14	3	4	0	0	2	1
2013년	37	19	7	10	0	0	1	0
2012년	25	11	3	6	0	0	5	0
2011년	52	28	5	7	0	1	9	2
평균	34.8	18.6	4.4	6.6	0.2	0.2	4.2	0.6

2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상반기 부패신고 보상금 12억 8천여만 원 지급 1억 원 이상 고액 보상금 비중 72%에 달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 총 12억 8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신고자 47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들의 신고를 통해 148억 1천여만 원이 환수결정 되었다고 밝혔다.
- 올 상반기 보상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1억 원 이상의 고액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이 6건 총 9억 2천여만 원에 달해 전체 12억 8천여만 원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상금 지급 사례 붙임 참조

상반기에 보상금을 지급한 42건을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급 건수로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금 지급액으로는 '관급공사비 및 위탁용역비 편취' 유형이 5억 5,9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패행위 유형별 보상금 지급 세부내역(2016 상반기)>

부패행위 유형	건수	지급액(천원)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15	32,558
연구개발 등 정부출연금·보조금 횡령	13	430,314
관급공사비 및 위탁용역비 편취	6	559,490
실업급여 및 장기요양급여 등 부정수급	5	14,710
보상금 편취	2	243,154
공공기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1	3,600
합계	42	1,283,826

□ 권익위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부패신고사건 138건에 대해 보상금 4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환수 결정액은 588억여 원이다.

또한 2013년에 9억 5천여만 원, 2014년에 6억 2천여만 원, 2015년 14억 3천여만 원, 2016년도에는 상반기에만 1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상금 지급액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는 올해 보상금 예산으로 작년보다 8억 8,700만 원 증액된 22억 4,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붙임1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구분	주요 내용
사례 1	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행정과 직원이 가로청소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업비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손실을 입힌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가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에 사건을 송부한 결과, ○○시가 업체의 제안 금액보다 13억여 원 을 초과한 금액에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u>가로청소 위탁사업비를 감액</u> 하였고, 이를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1억 6,400여만 원 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사례 2	신고자는 지식경제부 주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던 업체가 과제사업과는 관련 없는 일상적인 제조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장비를 구매하고 과제사업용으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정산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에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업체에 <u>횡령한 보조금 9억 5천여만 원</u> 을 환수결정하였으며, 이를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1억 2백여만 원 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사례 3	신고자는 강판제조업체의 대표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용역을 허위로 발주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u>정부출연금 45억 1천여만 원</u> 이 환수결정되었으며, 이를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1억 8,300여만 원 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사례 4	신고자는 공사 수주업체가 항구준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기성금액을 과다청구하여 횡령한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업체 대표 및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업체가 <u>편취한 공사비 및 추정금 20억 7백여만 원</u> 이 환수결정되었으며, 이를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1억 3백여만 원 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상 부과 및 환수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 회복, 증대 또는 비용 절감 금액이나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붙임2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소개

□ 보상금 지급 신청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신고 보상금의 성격 〉

- ▶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에 대한 기여금
 - 부패행위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수입회복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고자에게 기여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

□ 보상금 지급 요건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 이란 〉

- ▶ 물수 또는 추정금의 부과
 -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 보상금 지급 기준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2015. 10. 19.까지 신고건(한도: 20억원)	2015. 10. 20.부터 신고건(한도: 30억원)
1억원 이하	20%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3 기획재정부

제목 : 예타통과된 철도 SOC 사업에 대한 신속한 재정지원

- 기획재정부는 2016.7.8.자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 등 아래 3건의 사업에 대해 신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아 래>

	사업명	총연장	총사업비	예타결과
1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93.9km	2조 631억원	통과
2	수원발 KTX 직결사업	4.7km	2,554억원	통과
3	인천발 KTX 직결사업	3.5km	3,833억원	통과

- 이를 위해 금년 7월중 각 사업별로 기본계획수립비를 배정하고 2017년 예산안에도 기본설계비 등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임.

※ 절차: 예타통과 → 기본계획 수립 → 기본·실시설계 → 착공 → 완공.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 학교신설과 학교재배치 계획 연계 강화, 영세사학 해산 촉진 -
- 귀농귀촌 및 농어촌 관광 거점화 지원을 위한 폐교 활용 용도 확대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와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폐교가 귀농귀촌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 학생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복식학급 운영 및 순회교사 배치 등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곤란 및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 교육격차 심화 등

- 이를 위해, 지난 2015.12.31.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 및 지역유형 별로 학교 규모를 반영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강화한바 있으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 개선내용>

구 분	종 전	개 선	
면·도서·벽지지역	60명 이하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

-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 재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신설대체이전,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고 통합운영, 남·녀학교(남중+여중, 남고+여고) 통합, 일반고+특성화고 운영, 공·사립학교 통합, 거점중·고 육성 등

- 다만, 학교 신설요건 강화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신설 시기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 불편 등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학교 신설을 우선 허용하되,
- 신설학교가 개교될 때 까지 학교를 재배치토록 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영세 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중단된 해산 특혜기간의 연장 또는 삭제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97~'06년까지 34개 법인 해산)

- 교육부 권고기준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청한 교육청(경기, 전남, 경북)에 대하여는 “과” 단위의 한시적(3년) 전담조직 설치를 승인하였다.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

- 학생 수 감소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에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7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 동 개선방안은 지난 2.17.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폐교의 귀농귀촌 거점화' 과제를 포함한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TF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교육용시설에 귀농귀촌 시설 및 캠핑장 등을 추가하여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 수익계약 대상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포함하며,
 - 교육청과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귀농귀촌 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자체에 폐교재산의 무상임대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한 자체계획을 보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의를 강화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안)

1

추진 배경

□ 저출산 추세에 따라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 '00~'16년까지 약 206만명(25.9%) 감소, 향후 '20년까지 약 65만명(11.0%) 추가 감소 전망
- '20년까지 초 3만명, 중 15만명, 고 47만명 추가 감소 전망

(단위 : 만명)

급별	2000	2010	2016	2020	2025	2030
초	402	330	268	265	262	259
중	186	198	146	131	132	129
고	207	196	175	128	126	124
계	795	724	589	524	520	512

□ 저출산 및 학생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

- '16년 기준 300명 이하 학교수가 총 4,212교(초 2,645교, 중 1,166교, 고 401교)
- ※ 60명이하 학교 : ('01년) 700교 → ('10년) 1,572교 → ('16년) 1,813교

구분	60명이하	61~120명	121~180명	181~240명	241~300명	301~1000명	1000명초과	계
초	1,228	717	235	239	226	2,774	579	5,998
중	531	231	146	118	140	1,852	190	3,208
고	54	84	85	86	92	1,283	668	2,352
계	1,813	1,032	466	443	458	5,909	1,437	11,558

※ 휴교는 포함, 분교장 제외

□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악화

- 대부분 소규모 학교의 경우 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 및 상치교사 배치가 불가피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 학교 규모가 영세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곤란 및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2 그 간의 추진 경과

□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 강화('15.12.31)

- (권고기준 상향 조정) 면·도서·벽지지역은 종전 기준(60명) 적용, 읍지역은 분리 신설, 도시지역은 상향 조정

구 분	종 전	개 선('16년 이후)	
면·도서·벽지지역	60명 이하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

-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 신설) 복식학급 운영 학교,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교직원 수가 학생 수 보다 많은 학교 등 제시
- (인센티브 강화) 지역 중심에서 학교규모(학생수) 기준으로 개선하고, 지원액 상향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분교폐지	분교장		학교신설 대체이전	통합 운영학교
			개편	폐지		
종전	초	시지역 : 60 기타지역 : 30	1	10	30	·시설폐쇄 20 ·미폐쇄 10 (공동이용)
	중고	100			50	
개선	초	60명 이하 : 40 61-120명 : 50 120명초과 : 60	5	20명이하 : 20 21-40명 : 30 40명초과 : 40	60명 이하 : 30 61-120명 : 40 120명초과 : 50	·시설폐쇄 30 ·미폐쇄 10 (공동이용)
	중고	60명 이하 : 90 61-120명 : 100 120명초과 : 110			60명 이하 : 60 61-120명 : 70 120명초과 : 80	

□ 2016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인센티브 확정 교부('16.3.22)

- 통폐합 : 49교, 2,470억원, 신설대체 : 15교, 790억원

(단위 : 교, 억원)

본교폐지		분교폐지		분교장개편		신설대체이전		합계	
학교수	교부액	학교수	교부액	학교수	교부액	학교수	교부액	학교수	교부액
28	2,120	15	320	6	30	15	790	64	3,260

3 추진 상의 한계 및 문제점

- (정책 목표) 학교 통·폐합을 통한 재정 절감 측면만 부각되거나 '농산어촌 황폐화' 주장과 결합하여 교육적인 목표가 희석
- (지역 반발) 학교가 주요 기반시설로 인식되어 당사자인 학부모 외에 지역주민·동창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학교 폐지에 대한 반발 심화
- (영세사학) 소규모 사립학교는 법인 해산이 필요하나, 영세사학의 해산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
- (교육청 의지) 시도교육청 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의지 및 기준에 차이가 크고, 교원 정원 유지를 위해 과소학교 유지 경향
 - 일부 교육감은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 공약을 이유로 반대
- (폐교 관리)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효율적인 폐교 관리 미흡

4 추진 방안

4-1 교육청 별 전체 학교재배치 계획과 연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수 감소 및 소규모학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2014년부터 중투심사 강화*를 통한 학교 신설 적극 억제
 - * 중투심사 통과율 : ('13년) 141교(72.0%) → ('14년) 117교(54.9%) → ('15년) 102교(37.1%)
- 대부분의 교육청이 지역주민, 동문 및 지방의회 반대와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 등의 사유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소극적
- 일부 지역은 최근 학교신설 억제에 따라 주민들의 입주시기와 학교 신설 시기와의 시차 문제 발생으로 주민 집단민원 발생

※ '16년 4월 정기 중투심사시 통과 22건 중 적정규모 학교 관련 11건

□ 개선 방안

- (교육청의 전체 재배치계획과 연계 강화) 적극적인 학교재배치 유도를 위해 학교 신설과 교육청의 전체 학교재배치 계획과 연계 강화
 - 중투심사 시 학교 재배치계획*의 범위를 **현행 개발지역 인근 학교 중심에서 교육청의 전체 계획과 연계**하여 학교 신설여부 판단
 - * 신설대체이전,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고 통합운영, 남·녀학교(남중+여중, 남고+여고) 통합, 일반고+특성화고 운영, 공·사립학교 통합, 거점중·고 육성 등
- (사후조건부 승인) 일부지역의 주민 입주시기와 학교신설 시기와의 시차 발생에 따른 통학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사후조건부 승인 추진
 - 학교신설이 시급한 일부지역의 경우 교육청의 전체 계획과 연계하여 우선 승인하되, 개교 시까지 통폐합 미완료 시 교부금 감액 조치

4-2 영세 사립학교 해산 촉진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소규모 영세사학(학생수 300명 이하)은 354개교(초 11, 중 251, 고 92)로 전체 사립학교 1,660개교의 약 21.3% 차지

구분	60명 이하	121~180명	181~300명	301명 이상	계
초		4	7	64	75
중	70	98	83	386	637
고	3	45	44	856	948
계	73	147	134	1,306	1,660

- '97.8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동 특례규정을 '06.12월까지 2회 연장하여 34개 법인 해산
 - 해산지원금 55억원 지급 및 잔여재산 600억원 법인 및 개인 귀속
- 19대 국회에서 류성걸 의원(새)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폐기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영세 사학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12. 7)

□ 추진 방안

- 영세사학의 자발적인 해산 유도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 재발의 및 국회 통과 추진
 - 해산 특례기간을 '**21.12.31.(5년간)**까지 연장 또는 삭제하는 개정법률안 의원입법 발의('16.8월 중) 및 통과 적극 추진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5345호, 1997.8.22> ②(적용시한)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5345호, 1997.8.22> ②(적용시한)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또는 동 조항 삭제)

4-3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 등으로 인한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
 - ※ ('10) 3,386교 → ('12) 3,509교 → ('15) 3,627교 → ('16) 3,678교
- 폐교재산의 임대·매각 용도가 한정*되어 다양한 활용에 한계
 - 현재 교육청에서 보유중인 폐교 1,350교 중 417교(31%) 미활용
 - * 교육·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소득증대 용도로 한정

< 폐교재산 및 활용 현황 >

(’16. 5.18. 기준)

전체 폐교 재산	매각 폐교 재산	보유 폐교 재산 (A+B)	활용 폐교재산(A)									미활용 폐교 재산 (B)
			대 부							자체 활용	계	
			교육	사회 복지	문화	공공 체육	소득 증대	기타	소계			
3,678	2,328	1,350	243	41	76	11	234	109	714	219	933	417

□ 추진 방안

교육부, 농식품부, 행자부, 지자체(2), 교육청(2)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담당 과장으로 TF(단장 : 지방교육지원국장)를 구성하여 상호 연계협력방안 마련

○ 폐교부지를 귀농귀촌의 초기거점, 농어촌 관광거점으로 활용 방안

- 폐교재산 활용 용도에 귀농·귀촌 시설, 캠핑장 등을 추가

현 행	개 정(추가)
폐교재산 활용 용도(제2조제3호)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귀농·귀촌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의 시설, 캠핑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

-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추가하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사전 협의를 통해 귀농귀촌센터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자체에 폐교재산 무상임대 허용

현 행	개 정 (추가)
수의계약 대상(제5조제1항)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추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지자체 무상 사용 요건(제5조제4항)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미활용 2.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하였으나, 해당자가 없는 경우	(추가)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미활용 2.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하였으나, 해당자가 없는 경우 3.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의 해당 시도 지사가 폐교재산을 귀농·귀촌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의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협력 강화

-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농산어촌 지원 및 개발계획 추진 시, 학교 통폐합 지역에 대한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시설 확충 사업 반영 등
※ (예시) 농식품부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 통합하는 지역과 통합되는 지역이 Win-Win할 수 있도록 폐교활용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VIP 말씀내용(13.5.13) >>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을 잘 조합해 통합하는 지역과 통합되는 지역이 서로 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예시) : (한국문화예술포육진흥원)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대상 선정 시, 소규모 통폐합 학교에 대한 가산점 부여

4-4 행·재정 지원 강화

□ 통폐합 인센티브 강화

- 교육부 권고기준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기존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 인센티브 지원* 검토
- * (예) 학교규모 기준(학생수 기준) 인센티브 + α 추가

□ 한시적 전담조직 설치운영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 단위의 직제를 한시적(3년) 조직으로 설치·운영 지원
- 교육청의 추진계획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전담조직의 설치를 신청한 전남, 경북, 경기를 우선 승인
- 다만, 연도 중에 교육청에서 신청이 있는 경우, 추가 승인 검토

<한시조직 승인 검토(안)>

시도	조직명	검토(안)	
		4급 정원	총액인건비 반영
전남 ¹⁾	거점중등학교 육성 추진단	연장 승인 (1명)	반 영 (4명 이내)
경북 ²⁾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	연장 승인 (1명)	반 영 (4명 이내)
경기 ³⁾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	신규 승인 (1명)	반 영 (6명 이내)

- * 1), 2) 자체계획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기존 한시조직인 점을 감안 연장 승인
- 3) 학교 설립과 적정규모 육성 대상 학교가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승인

□ 적정규모 육성 지원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1.6억원)

- 교육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 내용을 고려, 7개 교육청(시지역 3, 도지역 4)을 선정하고, 교육청 별로 차등 지원(공청회, 홍보비 등 집행)
- ▷ 한시전담조직 운영 교육청(전남, 경북, 경기) : 9천만원 (3천만원× 3청)
- ▷ 자체계획 우수 교육청(부산, 인천, 울산, 경남) : 7천만원 (1.75천만원×4청)

□ 농산어촌 지역 우수 중·고등학교 육성

- (우수 중학교 육성) 농어촌 지역의 우수 중학교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지원 체제 구축(60교 180억 특교 지원)
 - 다양한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필수 및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기숙사 신축 및 리모델링, 특별실 구축 등 학교 시설기반 개선과 통학버스 운영, 각종 기자재 및 장비 구입 등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 학생복지정책과 기본계획 수립(3.24)
- (우수 고등학교 육성)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 육성, 운영 내실화,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역량 강화
 - 학생모집 자율성 확대, 기숙사 및 노후시설 개선비 등 지원, 교원 승진가산점 등 인센티브 강화, 행·재정 지원 강화 등
 - ※ 학교정책과 기본계획 수립(5.9)

4-5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폐교 활용 홍보 강화

□ 우수사례 성과 확산

- 행복교육박람회 개최 시('16.10.20~22), 적정규모 육성 및 폐교활용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국민의 이해 증진 및 관심 유도
- ※ 최근 개청한 세종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의 우수사례 전시관 운영 예정
- 시·도교육청 별 우수사례를 모아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및 홈페이지 등에 탑재

□ 폐교 활용 정보 서비스 개시

-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폐교재산 활용 현황과 지도, 사진 등을 첨부한 항목을 추가하여, '정부3.0 체험마당 시(6.19~22)' 서비스 개통

□ 기타 홍보

- 우수 사례 및 효과 등에 대한 기획기사·기고문 게재('16. 7월~)
-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관계전문가 및 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개최('16.12)

5

향후 추진 일정

- 중앙투자심사 개최 : 연간 3회(정기 4월, 수시 8월, 12월)
- 폐교활용법 개정 추진 : '16. 9월말 (국회 제출)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인센티브 예정교부 : '16. 10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 : '16. 하반기
 - * 학교 통폐합 등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지원 인센티브 기준 개선 등 추진
-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 '16.12월

참고 1

소규모학교 통폐합 현황

연도	초등학교(A)			중학교(B)			고등학교 폐지 (C)	계(D=A+B+C)			
	폐지		분교장 개 편	폐지		분교장 개 편		폐지		분교장 개 편	계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1982	11	12	69	1	-	-	1	13	12	69	94
1983	7	20	76	1	-	-	1	9	20	76	105
1984	1	17	59	2	-	-	-	3	17	59	79
1985	2	13	59	1	-	-	-	3	13	59	75
1986	1	9	34	4	-	-	4	9	9	34	52
1987	4	17	35	5	-	-	2	11	17	35	63
1988	3	42	102	1	-	-	-	4	42	102	148
1989	3	44	104	-	1	-	-	3	45	104	152
1990	3	47	83	1	-	-	1	5	47	83	135
1991	23	124	111	-	1	2	-	23	125	113	261
1992	51	184	135	1	-	-	-	52	184	135	371
1993	48	159	114	1	3	-	1	50	162	114	326
1994	74	257	164	6	-	1	3	83	257	165	505
1995	92	231	81	3	2	4	1	96	233	85	414
1996	38	132	51	5	1	-	-	43	133	51	227
1997	47	95	36	6	2	1	5	58	97	37	192
1998	67	145	57	9	1	2	1	77	146	59	282
1999	269	319	161	18	7	20	4	291	326	181	798
2000	40	73	41	6	2	4	1	47	75	45	167
2001	16	37	6	6	4	-	6	28	41	6	75
2002	18	36	7	9	4	2	1	28	40	9	77
2003	15	30	4	5	2	-	2	22	32	4	58
2004	14	24	-	8	2	-	1	23	26	-	49
2005	9	21	4	8	1	1	4	21	22	5	48
2006	12	24	4	2	1	-	2	16	25	4	45
2007	35	53	4	12	2	-	5	52	55	4	111
2008	21	50	3	7	6	1	5	33	56	4	93
2009	33	45	5	10	6	1	3	46	51	6	103
2010	12	28	2	7	2	-	1	20	30	2	52
2011	11	27	8	4	3	1	-	15	30	9	54
2012	24	26	2	7	1	2	1	32	27	4	63
2013	10	27	3	6	1	-	5	21	28	3	52
2014	11	12	2	5	2	-	8	24	14	2	40
2015	12	10	-	4	-	-	4	20	10	-	30
계	1,037	2,390	1,626	171	57	42	73	1,281	2,447	1,668	5,396

참고 2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현황 ('16.4.1.기준)

□ 소규모 학교(본교 기준)는 '01년 700개교에서 '16년 1,813개교로 1,113개교 증가(초 720/중 363/고 30)

(단위 : 교)

구분	초			중			고	계		
	본교	분교장	계	본교	분교장	계	본교	본교	분교장	계
2001	508	619	1,127	168	52	220	24	700	671	1,371
2002	548	593	1,141	217	53	270	39	804	646	1,450
2003	610	566	1,176	257	51	308	51	918	617	1,535
2004	685	542	1,227	299	49	348	54	1,038	591	1,629
2005	767	528	1,295	318	49	367	57	1,142	577	1,719
2006	845	507	1,352	336	48	384	64	1,245	555	1,800
2007	873	456	1,329	359	46	405	60	1,292	502	1,794
2008	959	412	1,371	385	42	427	48	1,392	454	1,846
2009	1,032	368	1,400	404	38	442	49	1,485	406	1,891
2010	1,099	348	1,447	424	35	459	49	1,572	383	1,955
2011	1,130	322	1,452	422	33	455	50	1,602	355	1,957
2012	1,166	296	1,462	426	34	460	50	1,642	330	1,972
2013	1,188	271	1,459	442	33	475	50	1,680	304	1,984
2014	1,208	260	1,468	493	31	524	52	1,753	291	2,044
2015	1,212	250	1,462	511	31	542	59	1,782	281	2,063
2016	1,228	241	1,469	531	29	560	54	1,813	270	2,083

※ 휴교 학교 포함

□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본교) 시도별 현황 ('16.4.1.기준)

(단위 : 개교)

구분	초	중	고	계
계	1,228	531	54	1,813
서울				
부산	9	1		10
대구	1	2		3
인천	14	10	5	29
광주	3	1		4
대전	3	1		4
울산	5	1		6
세종	3	2		5
경기	76	19	1	96
강원	156	64	12	232
충북	97	33	1	131
충남	149	45	1	195
전북	183	80	9	272
전남	178	104	7	289
경북	188	112	11	311
경남	143	49	7	199
제주	20	7		27

※ 휴교 학교 포함

□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교 현황

구분	지역	60명 이하		61~120명		121~180명		181~240명		241~300명		301명 이상		계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초	면도서벽지	1,252	60.5	501	24.2	97	4.7	57	2.8	41	2.0	123	5.9	2,071
	읍지역	121	18.0	116	17.2	32	4.8	40	5.9	32	4.8	332	49.3	673
	시지역	69	2.0	122	3.5	107	3.1	130	3.7	159	4.6	2,881	83.1	3,468
	소계	1,442	23.2	739	11.9	236	3.8	227	3.7	232	3.7	3,336	53.7	6,212
중	면도서벽지	516	57.3	178	19.8	83	9.2	37	4.1	21	2.3	65	7.2	900
	읍지역	19	5.3	27	7.5	44	12.3	39	10.9	37	10.3	193	53.8	359
	시지역	6	0.3	23	1.2	23	1.2	30	1.5	56	2.8	1,837	93.0	1,975
	소계	541	16.7	228	7.1	150	4.6	106	3.3	114	3.5	2,095	64.8	3,234
고	면도서벽지	55	15.2	51	14.1	59	16.3	44	12.2	39	10.8	114	31.5	362
	읍지역	2	0.6	15	4.6	22	6.8	21	6.5	30	9.3	234	72.2	324
	시지역	2	0.1	7	0.4	9	0.5	14	0.8	23	1.4	1,603	96.7	1,658
	소계	59	2.5	73	3.1	90	3.8	79	3.4	92	3.9	1,951	83.2	2,344
계	면도서벽지	1,823	54.7	730	21.9	239	7.2	138	4.1	101	3.0	302	9.1	3,333
	읍지역	142	10.5	158	11.7	98	7.2	100	7.4	99	7.3	759	56.0	1,356
	시지역	77	1.1	152	2.1	139	2.0	174	2.5	238	3.4	6,321	89.0	7,101
	소계	2,042	17.3	1,040	8.8	476	4.0	412	3.5	438	3.7	7,382	62.6	11,790

※ 권고기준 , 분교장 포함, 휴교 학교 제외

참고 3

학교수, 학급수 및 학생수 증감 추이

□ (학교수) '05년 10,633교 대비 '16년 880교(8.3%) 증가

* 매년 4.1 기준/휴교 포함, 분교 제외, 국립 제외

(단위 : 교)

구분	급별	2005	2010	2016	증감(학교수, 비율)			
					'05~'16		'10~'16	
광역시	초	1,605	1,719	1,824	219	13.6	114	7.1
	중	959	1,026	1,070	111	11.6	67	7.0
	고	762	825	867	105	13.8	63	8.3
	소계	3,326	3,570	3,761	435	13.1	244	7.3
도	초	4,024	4,118	4,157	133	3.3	94	2.3
	중	1,967	2,095	2,129	162	8.2	128	6.5
	고	1,316	1,409	1,466	150	11.4	93	7.1
	소계	7,307	7,622	7,752	445	6.1	315	4.3
합계	초	5,629	5,837	5,981	352	6.3	208	3.7
	중	2,926	3,121	3,199	273	9.3	195	6.7
	고	2,078	2,234	2,333	255	12.3	156	7.5
	소계	10,633	11,192	11,513	880	8.3	559	5.3

□ (학급수) '05년 236,113학급 대비 '16년 4,523학급(△1.9%) 감소

* 매년 4.1 기준/분교 포함, 국립 제외

(단위 : 학급, %)

구분	급별	2005	2010	2016	증감(학급수, 비율)			
					'05~'16		'10~'16	
광역시	초	54,473	51,849	49,639	△4,834	△8.9	△2,210	△4.3
	중	26,011	25,334	23,132	△2,879	△11.1	△2,202	△8.7
	고	24,986	26,009	25,694	708	2.8	△315	△1.2
	소계	105,470	103,192	98,465	△7,005	△6.6	△4,727	△4.6
도	초	71,493	71,698	69,757	△1,736	△2.4	△1,941	△2.7
	중	30,779	32,852	29,916	△863	△2.8	△2,936	△8.9
	고	28,371	31,558	33,452	5,081	17.9	1,894	6.0
	소계	130,643	136,108	133,125	2,482	1.9	△2,983	△2.2
합계	초	125,966	123,547	119,396	△6,570	△5.2	△4,151	△3.4
	중	56,790	58,186	53,048	△3,742	△6.6	△5,138	△8.8
	고	53,357	57,567	59,146	5,789	10.8	1,579	2.7
	소계	236,113	239,300	231,590	△4,523	△1.9	△7,710	△3.2

□ (학생수) '05년 7,760,835명 대비 '16년 1,898,501명(△24.5%) 감소

* 매년 4.1 기준/분교 포함, 국립 제외 (단위 : 명, %)

구분	급별	2005	2010	2016	증감(학생수, 비율)			
					'05~'16		'10~'16	
광역시	초	1,787,987	1,416,054	1,126,768	△661,219	△37.0	△371,933	△20.8
	중	941,801	880,365	624,190	△317,611	△33.7	△61,436	△6.5
	고	843,860	898,104	757,916	△85,944	△10.2	54,244	6.4
	소계	3,573,648	3,194,523	2,508,874	△1,064,774	△29.8	△379,125	△10.6
도	초	2,224,053	1,872,482	1,542,729	△681,324	△30.6	△351,571	△15.8
	중	1,062,412	1,088,196	829,806	△232,606	△21.9	25,784	2.4
	고	900,722	1,045,595	980,925	80,203	8.9	144,873	16.1
	소계	4,187,187	4,006,273	3,353,460	△833,727	△19.9	△180,914	△4.3
합계	초	4,012,040	3,288,536	2,669,497	△1,342,543	△33.5	△723,504	△18.0
	중	2,004,213	1,968,561	1,453,996	△550,217	△27.5	△35,652	△1.8
	고	1,744,582	1,943,699	1,738,841	△5,741	△0.3	199,117	11.4
	소계	7,760,835	7,200,796	5,862,334	△1,898,501	△24.5	△560,039	△7.2

□ 시도별

○ 학교수

* 매년 4.1 기준/휴교 포함, 분교 제외, 국립 제외 (단위 : 교, %)

시도	급별	2005	2010	2016	증감(학교수, 비율)			
					'05~'16		'10~'16	
서울	초	561	585	597	36	6.4	12	2.1
	중	361	374	382	21	5.8	8	2.1
	고	290	308	315	25	8.6	7	2.3
	소계	1,212	1,267	1,294	82	6.8	27	2.1
부산	초	284	297	307	23	8.1	10	3.4
	중	166	171	172	6	3.6	1	0.6
	고	132	138	140	8	6.1	2	1.4
	소계	582	606	619	37	6.4	13	2.1
대구	초	199	212	222	23	11.6	10	4.7
	중	117	122	124	7	6.0	2	1.6
	고	84	90	91	7	8.3	1	1.1
	소계	400	424	437	37	9.3	13	3.1
인천	초	205	225	246	41	20.0	21	9.3
	중	114	128	134	20	17.5	6	4.7
	고	99	113	124	25	25.3	11	9.7
	소계	418	466	504	86	20.6	38	8.2

시도	급별	2005	2010	2016	증감(학교수, 비율)			
					'05~'16		'10~'16	
광주	초	127	144	152	25	19.7	8	5.6
	중	74	84	89	15	20.3	5	6.0
	고	60	64	66	6	10.0	2	3.1
	소계	261	292	307	46	17.6	15	5.1
대전	초	124	138	146	22	17.7	8	5.8
	중	76	86	88	12	15.8	2	2.3
	고	56	61	62	6	10.7	1	1.6
	소계	256	285	296	40	15.6	11	3.9
울산	초	105	118	117	12	11.4	△1	△0.8
	중	51	61	63	12	23.5	2	3.3
	고	41	51	56	15	36.6	5	9.8
	소계	197	230	236	39	19.8	6	2.6
세종	초			37	37		37	
	중			18	18		18	
	고			13	13		13	
	소계	0	0	68	68		68	
광역시 단위	초	1,605	1,719	1,824	219	13.6	105	6.1
	중	959	1,026	1,070	111	11.6	44	4.3
	고	762	825	867	105	13.8	42	5.1
	소계	3,326	3,570	3,761	435	13.1	191	5.4
경기	초	1,011	1,145	1,227	216	21.4	82	7.2
	중	472	574	619	147	31.1	45	7.8
	고	338	409	470	132	39.1	61	14.9
	소계	1,821	2,128	2,316	495	27.2	188	8.8
강원	초	365	352	350	△15	△4.1	△2	△0.6
	중	161	163	162	1	0.6	△1	△0.6
	고	113	116	116	3	2.7	0	0.0
	소계	639	631	628	△11	△1.7	△3	△0.5
충북	초	250	257	258	8	3.2	1	0.4
	중	121	130	126	5	4.1	△4	△3.1
	고	77	81	81	4	5.2	0	0.0
	소계	448	468	465	17	3.8	△3	△0.6
충남	초	441	429	404	△37	△8.4	△25	△5.8
	중	186	189	184	△2	△1.1	△5	△2.6
	고	109	116	115	6	5.5	△1	△0.9
	소계	736	734	703	△33	△4.5	△31	△4.2
전북	초	418	411	414	△4	△1.0	3	0.7
	중	201	206	209	8	4.0	3	1.5
	고	129	130	131	2	1.6	1	0.8
	소계	748	747	754	6	0.8	7	0.9

시도	급별	2005	2010	2016	증감(학급수, 비율)			
					'05~'16	'10~'16		
전남	초	454	432	426	△28	△6.2	△6	△1.4
	중	248	247	250	2	0.8	3	1.2
	고	149	154	143	△6	△4.0	△11	△7.1
	소계	851	833	819	△32	△3.8	△14	△1.7
경북	초	501	493	468	△33	△6.6	△25	△5.1
	중	283	278	271	△12	△4.2	△7	△2.5
	고	199	192	191	△8	△4.0	△1	△0.5
	소계	983	963	930	△53	△5.4	△33	△3.4
경남	초	481	494	499	18	3.7	5	1.0
	중	254	267	264	10	3.9	△3	△1.1
	고	173	182	190	17	9.8	8	4.4
	소계	908	943	953	45	5.0	10	1.1
제주	초	103	105	111	8	7.8	6	5.7
	중	41	41	44	3	7.3	3	7.3
	고	29	29	29	0	0.0	0	0.0
	소계	173	175	184	11	6.4	9	5.1
도 단위	초	4,024	4,118	4,157	133	3.3	39	0.9
	중	1,967	2,095	2,129	162	8.2	34	1.6
	고	1,316	1,409	1,466	150	11.4	57	4.0
	소계	7,307	7,622	7,752	445	6.1	130	1.7
합계	초	5,629	5,837	5,981	352	6.3	208	3.7
	중	2,926	3,121	3,199	273	9.3	195	6.7
	고	2,078	2,234	2,333	255	12.3	156	7.5
	소계	10,633	11,192	11,513	880	8.3	559	5.3

○ 학급수

* 매년 4.1 기준/휴교 포함, 분교 제외, 국립 제외

(단위 : 교, %)

시도	급별	2005	2010	2016	증감(학급수, 비율)			
					'05~'16	'10~'16		
서울	초	21,632	20,292	18,562	△3,070	△14.2	△1,730	△8.5
	중	10,780	10,151	8,982	△1,798	△16.7	△1,169	△11.5
	고	10,483	10,477	10,030	△453	△4.3	△447	△4.3
	소계	42,895	40,920	37,574	△5,321	△12.4	△3,346	△8.2
부산	초	8,824	7,661	7,166	△1,658	△18.8	△495	△6.5
	중	4,223	3,904	3,347	△876	△20.7	△557	△14.3
	고	3,998	3,987	3,818	△180	△4.5	△169	△4.2
	소계	17,045	15,552	14,331	△2,714	△15.9	△1,221	△7.9
대구	초	6,261	6,032	5,511	△750	△12.0	△521	△8.6
	중	3,037	2,960	2,778	△259	△8.5	△182	△6.1
	고	2,910	3,072	3,009	99	3.4	△63	△2.1
	소계	12,208	12,064	11,298	△910	△7.5	△766	△6.3

시도	급별	2005	2010	2016	증감(학급수, 비율)			
					'05~'16	'10~'16		
인천	초	6,953	6,892	6,746	△207	△3.0	△146	△2.1
	중	2,973	2,991	2,885	△88	△3.0	△106	△3.5
	고	2,874	3,341	3,379	505	17.6	38	1.1
	소계	12,800	13,224	13,010	210	1.6	△214	△1.6
광주	초	3,841	4,111	3,960	119	3.1	△151	△3.7
	중	1,770	1,885	1,835	65	3.7	△50	△2.7
	고	1,690	1,810	1,865	175	10.4	55	3.0
	소계	7,301	7,806	7,660	359	4.9	△146	△1.9
대전	초	3,759	3,887	3,957	198	5.3	70	1.8
	중	1,816	1,907	1,665	△151	△8.3	△242	△12.7
	고	1,733	1,879	1,855	122	7.0	△24	△1.3
	소계	7,308	7,673	7,477	169	2.3	△196	△2.6
울산	초	3,203	2,974	2,898	△305	△9.5	△76	△2.6
	중	1,412	1,536	1,307	△105	△7.4	△229	△14.9
	고	1,298	1,443	1,458	160	12.3	15	1.0
	소계	5,913	5,953	5,663	△250	△4.2	△290	△4.9
세종	초			839	839		839	
	중			333	333		333	
	고			280	280		280	
	소계	0	0	1,452	1,452		1,452	
광역시 단위	초	54,473	51,849	49,639	△4,834	△8.9	△2,210	△4.3
	중	26,011	25,334	23,132	△2,879	△11.1	△2,202	△8.7
	고	24,986	26,009	25,694	708	2.8	△315	△1.2
	소계	105,470	103,192	98,465	△7,005	△6.6	△4,727	△4.6
경기	초	26,289	28,722	28,954	2,665	10.1	232	0.8
	중	11,965	13,434	12,757	792	6.6	△677	△5.0
	고	10,627	12,730	14,437	3,810	35.9	1,707	13.4
	소계	48,881	54,886	56,148	7,267	14.9	1,262	2.3
강원	초	4,585	4,426	4,280	△305	△6.7	△146	△3.3
	중	1,832	1,899	1,774	△58	△3.2	△125	△6.6
	고	1,799	1,868	1,866	67	3.7	△2	△0.1
	소계	8,216	8,193	7,920	△296	△3.6	△273	△3.3
충북	초	4,238	4,070	4,192	△46	△1.1	122	3.0
	중	1,866	1,943	1,741	△125	△6.7	△202	△10.4
	고	1,653	1,780	1,819	166	10.0	39	2.2
	소계	7,757	7,793	7,752	△5	△0.1	△41	△0.5
충남	초	5,808	5,783	5,631	△177	△3.0	△152	△2.6
	중	2,406	2,508	2,234	△172	△7.1	△274	△10.9
	고	2,241	2,441	2,463	222	9.9	22	0.9
	소계	10,455	10,732	10,328	△127	△1.2	△404	△3.8

시도	급별	2005	2010	2016	증감(학급수, 비율)			
					'05~'16		'10~'16	
전북	초	5,734	5,450	5,033	△701	△12.2	△417	△7.7
	중	2,408	2,464	2,079	△329	△13.7	△385	△15.6
	고	2,404	2,423	2,430	26	1.1	7	0.3
	소계	10,546	10,337	9,542	△1,004	△9.5	△795	△7.7
전남	초	6,405	5,729	4,986	△1,419	△22.2	△743	△13.0
	중	2,543	2,479	2,144	△399	△15.7	△335	△13.5
	고	2,377	2,533	2,494	117	4.9	△39	△1.5
	소계	11,325	10,741	9,624	△1,701	△15.0	△1,117	△10.4
경북	초	7,624	7,038	6,223	△1,401	△18.4	△815	△11.6
	중	3,295	3,245	2,937	△358	△10.9	△308	△9.5
	고	3,110	3,172	3,229	119	3.8	57	1.8
	소계	14,029	13,455	12,389	△1,640	△11.7	△1,066	△7.9
경남	초	9,112	8,825	8,737	△375	△4.1	△88	△1.0
	중	3,813	4,195	3,548	△265	△6.9	△647	△15.4
	고	3,549	3,955	4,029	480	13.5	74	1.9
	소계	16,474	16,975	16,314	△160	△1.0	△661	△3.9
제주	초	1,698	1,655	1,721	23	1.4	66	4.0
	중	651	685	702	51	7.8	17	2.5
	고	611	656	685	74	12.1	29	4.4
	소계	2,960	2,996	3,108	148	5.0	112	3.7
도 단위	초	71,493	71,698	69,757	△1,736	△2.4	△1,941	△2.7
	중	30,779	32,852	29,916	△863	△2.8	△2,936	△8.9
	고	28,371	31,558	33,452	5,081	17.9	1,894	6.0
	소계	130,643	136,108	133,125	2,482	1.9	△2,983	△2.2
합계	초	125,966	123,547	119,396	△6,570	△5.2	△4,151	△3.4
	중	56,790	58,186	53,048	△3,742	△6.6	△5,138	△8.8
	고	53,357	57,567	59,146	5,789	10.8	1,579	2.7
	소계	236,113	239,300	231,590	△4,523	△1.9	△7,710	△3.2

○ 학생수

* 매년 4.1 기준/휴교 포함, 분교 제외, 국립 제외

(단위 : 교, %)

시도	급별	2005	2010	2016	증감(학생수, 비율)			
					'05~'16		'10~'16	
서울	초	709,547	564,626	437,041	△272,506	△38.4	△127,585	△22.6
	중	377,504	343,797	239,189	△138,315	△36.6	△104,608	△30.4
	고	351,729	360,078	297,490	△54,239	△15.4	△62,588	△17.4
	소계	1,438,780	1,268,501	973,720	△465,060	△32.3	△294,781	△23.2
부산	초	264,315	196,629	151,921	△112,394	△42.5	△44,708	△22.7
	중	146,491	129,285	87,326	△59,165	△40.4	△41,959	△32.5
	고	132,322	133,066	103,819	△28,503	△21.5	△29,247	△22.0
	소계	543,128	458,980	343,066	△200,062	△36.8	△115,914	△25.3

시도	급별	2005	2010	2016	증감(학생수, 비율)			
					'05~'16		'10~'16	
대구	초	211,868	166,272	124,441	△87,427	△41.3	△41,831	△25.2
	중	111,891	107,272	73,278	△38,613	△34.5	△33,994	△31.7
	고	100,364	108,115	90,796	△9,568	△9.5	△17,319	△16.0
	소계	424,123	381,659	288,515	△135,608	△32.0	△93,144	△24.4
인천	초	229,546	182,590	155,036	△74,510	△32.5	△27,554	△15.1
	중	119,834	112,142	82,895	△36,939	△30.8	△29,247	△26.1
	고	99,140	112,830	96,227	△2,913	△2.9	△16,603	△14.7
	소계	448,520	407,562	334,158	△114,362	△25.5	△73,404	△18.0
광주	초	135,701	115,246	88,427	△47,274	△34.8	△26,819	△23.3
	중	67,159	69,752	51,155	△16,004	△23.8	△18,597	△26.7
	고	57,236	66,797	61,492	4,256	7.4	△5,305	△7.9
	소계	260,096	251,795	201,074	△59,022	△22.7	△50,721	△20.1
대전	초	129,952	109,013	85,945	△44,007	△33.9	△23,068	△21.2
	중	65,474	65,904	47,644	△17,830	△27.2	△18,260	△27.7
	고	58,205	64,794	57,088	△1,117	△1.9	△7,706	△11.9
	소계	253,631	239,711	190,677	△62,954	△24.8	△49,034	△20.5
울산	초	107,058	81,678	66,067	△40,991	△38.3	△15,611	△19.1
	중	53,448	52,213	35,272	△18,176	△34.0	△16,941	△32.4
	고	44,864	52,424	44,543	△321	△0.7	△7,881	△15.0
	소계	205,370	186,315	145,882	△59,488	△29.0	△40,433	△21.7
세종	초			17,890	17,890		17,890	
	중			7,431	7,431		7,431	
	고			6,461	6,461		6,461	
	소계	0	0	31,782	31,782		31,782	
광역시 단위	초	1,787,987	1,416,054	1,126,768	△661,219	△37.0	△289,286	△20.4
	중	941,801	880,365	624,190	△317,611	△33.7	△256,175	△29.1
	고	843,860	898,104	757,916	△85,944	△10.2	△140,188	△15.6
	소계	3,573,648	3,194,523	2,508,874	△1,064,774	△29.8	△685,649	△21.5
경기	초	979,630	848,135	727,653	△251,977	△25.7	△120,482	△14.2
	중	463,457	482,170	380,927	△82,530	△17.8	△101,243	△21.0
	고	369,764	459,869	439,959	70,195	19.0	△19,910	△4.3
	소계	1,812,851	1,790,174	1,548,539	△264,312	△14.6	△241,635	△13.5
강원	초	119,578	99,312	77,005	△42,573	△35.6	△22,307	△22.5
	중	58,972	58,408	43,996	△14,976	△25.4	△14,412	△24.7
	고	52,944	55,652	52,113	△831	△1.6	△3,539	△6.4
	소계	231,494	213,372	173,114	△58,380	△25.2	△40,258	△18.9
충북	초	125,359	103,806	82,992	△42,367	△33.8	△20,814	△20.1
	중	60,034	61,685	45,314	△14,720	△24.5	△16,371	△26.5
	고	53,433	59,137	53,841	408	0.8	△5,296	△9.0
	소계	238,826	224,628	182,147	△56,679	△23.7	△42,481	△18.9

시도	급별	2005	2010	2016	증감(학생수, 비율)			
					'05~'16	'10~'16		
충남	초	155,336	137,729	114,739	△40,597	△26.1	△22,990	△16.7
	중	73,896	78,364	60,018	△13,878	△18.8	△18,346	△23.4
	고	67,459	76,255	72,444	4,985	7.4	△3,811	△5.0
	소계	296,691	292,348	247,201	△49,490	△16.7	△45,147	△15.4
전북	초	156,733	125,791	96,940	△59,793	△38.1	△28,851	△22.9
	중	75,975	76,583	56,923	△19,052	△25.1	△19,660	△25.7
	고	67,302	73,509	68,706	1,404	2.1	△4,803	△6.5
	소계	300,010	275,883	222,569	△77,441	△25.8	△53,314	△19.3
전남	초	156,200	123,414	92,515	△63,685	△40.8	△30,899	△25.0
	중	74,105	74,251	53,180	△20,925	△28.2	△21,071	△28.4
	고	67,310	72,493	67,000	△310	△0.5	△5,493	△7.6
	소계	297,615	270,158	212,695	△84,920	△28.5	△57,463	△21.3
경북	초	205,569	163,701	127,398	△78,171	△38.0	△36,303	△22.2
	중	100,807	97,491	70,468	△30,339	△30.1	△27,023	△27.7
	고	92,559	96,524	87,632	△4,927	△5.3	△8,892	△9.2
	소계	398,935	357,716	285,498	△113,437	△28.4	△72,218	△20.2
경남	초	274,516	227,093	185,681	△88,835	△32.4	△41,412	△18.2
	중	132,190	134,925	99,087	△33,103	△25.0	△35,838	△26.6
	고	111,616	129,332	117,253	5,637	5.1	△12,079	△9.3
	소계	518,322	491,350	402,021	△116,301	△22.4	△89,329	△18.2
제주	초	51,132	43,501	37,806	△13,326	△26.1	△5,695	△13.1
	중	22,976	24,319	19,893	△3,083	△13.4	△4,426	△18.2
	고	18,335	22,824	21,977	3,642	19.9	△847	△3.7
	소계	92,443	90,644	79,676	△12,767	△13.8	△10,968	△12.1
도 단위	초	2,224,053	1,872,482	1,542,729	△681,324	△30.6	△329,753	△17.6
	중	1,062,412	1,088,196	829,806	△232,606	△21.9	△258,390	△23.7
	고	900,722	1,045,595	980,925	80,203	8.9	△64,670	△6.2
	소계	4,187,187	4,006,273	3,353,460	△833,727	△19.9	△652,813	△16.3
합계	초	4,012,040	3,288,536	2,669,497	△1,342,543	△33.5	△723,504	△18.0
	중	2,004,213	1,968,561	1,453,996	△550,217	△27.5	△35,652	△1.8
	고	1,744,582	1,943,699	1,738,841	△5,741	△0.3	199,117	11.4
	소계	7,760,835	7,200,796	5,862,334	△1,898,501	△24.5	△560,039	△7.2

참고 4

시·도교육청별 폐교재산 및 활용 현황

폐교재산 현황

- (폐교재산의 지속적 증가) 학생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 등으로 인한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재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 ('10) 3,386교 → ('12) 3,509교 → ('15) 3,627교 → ('16) 3,678교

- (보유 폐교재산) 전체 폐교재산 3,678교 중 현재 보유 중인 폐교재산은 총 1,350교*(36.7%)이며, 2,328교(63.3%)는 매각 완료

* 대부 714교(52.9%), 자체 활용 219교(16.2%), 미활용 417교(30.9%)

폐교재산 활용 현황

- (총괄) 보유 폐교재산 총 1,350교 중 활용 중인 폐교재산은 933교(69.1%)이며, 이 중 대부 714교(52.9%), 자체 활용 219교(16.2%)

< 폐교재산 및 활용 현황 >

('16. 5.18. 기준)

전체 폐교 재산	매각 폐교 재산	보유 폐교 재산 (A+B)	활용 폐교재산(A)									미활용 폐교 재산 (B)
			대 부							자 체 활 용	계	
			교육	사 회 복 지	문 화	공 공 체 육	소 득 증 대	기 타	소 계			
3,678	2,328	1,350	243	41	76	11	234	109	714	219	933	417

- ▶ 교육용 시설 : 체험학습장, 박물관, 미술관, 평생교육시설 등
- ▶ 사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마을정보화센터 등
- ▶ 문화시설 : 문화·예술작업장, 주민 문화체험장, 공예품 전시장 등
- ▶ 공공체육시설 : 주민체육시설, 야구연습장, 수상레포츠교육 등
- ▶ 소득증대시설 : 지역특산물 가공장, 농촌체험시설, 경작지 등
- ▶ 기타 시설 : 캠핑장, 도서관, 태양광연구소, 고시원, 창고, 주차장 등

- (대부 714교) 교육 243건, 소득증대 234건, 문화 76건, 사회복지

41건, 체육 11건, 기타 109건 등의 시설로 활용

대부 사례

▶ (부산 구. 윤산중) 부산광역시에 무상 대부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총 30억원의 국비 및 시비를 투입하여 '15.4월 부산산림교육센터 개원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자 등 산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민 산림체험교육 등에 활용

▶ (경기 안산시 구. 화정초)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에서는 약 19억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후 안산대학교에 안산화정영어마을을 위탁 운영

※ '12년 총 활용 인원 7,556명 중 저소득 청소년 544명 지원

- (자체활용 219교) 신설학교 용지, 학생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학생 체육시설, 대안교육시설, 교직원 사택 등으로 활용

□ 폐교재산 매각 현황

- (매각 2,328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 및 민간에 매각
 - 매각한 폐교는 주로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

지자체 매입 후 활용 사례

▶ (전남 여수 구. 굴전초) 여수시에서 매입한 후 약 28억원을 투입하여 굴전 여가캠핑장을 조성한 후 민간에게 위탁 운영('13년 약 21,000명 이용)

▶ (충남 태안 구. 남진초) 서울 서초구청에서 매입하여 주말농장 등과 연계한 서초휴양소 운영,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한 지역주민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전남 완주 구. 삼기초) 완주군에서 매입(2.8억) 및 리모델링(10억)한 후 지역 경제순환센터 개관,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등을 법인 및 민간에 위탁 운영

□ 교육청 미활용 폐교재산 활용 계획

- (총괄) 미활용 폐교재산은 총 417교
 - 전남 130교, 경남 86교, 경북 51교, 강원 43교, 충남 29교, 충북 28교, 그 외 9개 지역 50교 등으로 도지역이 392교(94.0%)로 대부분 차지
 - ※ 서울, 광주, 대구는 미활용 폐교재산 없음
- (활용계획) 매각 160교(38.4%), 대부 138교(33.1%), 자체활용 23교(5.5%), 보존관리 96교(23.0%) 예정

시 도	미활용 현황 (향후활용계획)				
	매 각	대 부	자체활용	보존관리	합 계
합계	160	138	23	96	417
서울					-
부산	4		3		7
대구	2				2
인천	7				7
광주					-
대전	2				2
울산	2	1	3		6
세종				1	1
시지역 소계	17	1	6	1	25
경기	1	15	1		17
강원	20	23			43
충북	8	20			28
충남	20	3	1	5	29
전북				6	6
전남	52	22	3	53	130
경북	27	20	4	-	51
경남	15	34	7	30	86
제주			1	1	2
도지역 소계	143	137	17	95	392

□ 폐교재산 총괄표

(단위 : 교)

시도	폐교 재산	매각 완료	보유 폐교 재산	활용현황										미활용 현황 (향후활용계획)				
				대 부								자체 활용	계					
				교육	사회 복지	문화 시설	공공 체육	소득 증대	기타	소계	매각			대부	자체 활용	보존 관리	계	
합계	3,678	2,328	1,350	243	41	76	11	234	109	714	219	933	160	138	23	96	417	
서울	1	1																
부산	31	11	20	3						3	10	13	4		3		7	
대구	30	12	18	2		4			1	7	9	16	2				2	
인천	54	36	18	5						5	6	11	7				7	
광주	14	7	7	3		2				5	2	7					-	
대전	8	4	4	1						1	1	2	2				2	
울산	25	9	16	1	1		1			3	7	10	2	1	3		6	
세종	13	12	1													1	1	
광역시 이상 (소계)	176	92	84	15	1	6	1	0	1	24	35	59	17	1	6	1	25	
경기	171	97	74	33	2	7	3	3		48	9	57	1	15	1		17	
강원	446	212	234	15	4	14	1	124	15	173	18	191	20	23			43	
충북	235	107	128	21	4	3		33	23	84	16	100	8	20			28	
충남	256	191	65	10	1			5	3	19	17	36	20	3	1	5	29	
전북	321	269	52	3	3	4		1		11	35	46				6	6	
전남	802	610	192	26	4	6	1	18	7	62		62	52	22	3	53	130	
경북	683	440	243	44	10	12	1	22	49	138	54	192	27	20	4	-	51	
경남	556	306	250	65	12	20	3	20	9	129	35	164	15	34	7	30	86	
제주	32	4	28	11	-	4	1	8	2	26		26			1	1	2	
도지역 (소계)	3,502	2,236	1,266	228	40	70	10	234	108	690	184	874	143	137	17	95	392	

참고 5

사립학교법 개정(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19대)

현행	개정안
법률 제5345호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부칙 ① (施行日) (생략) ② (적용시한) 제3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학 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법률 제5345호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부칙 ① (施行日) (현행과 같음) <삭 제>

[참고] 사립 학교법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⑥ (생략)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교육부 공고 제2016-205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교육부장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 수의계약 대상 및 무상임대 범위를 확대하여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 활용 용도 추가

폐교재산 활용 용도에 귀농·귀촌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의 시설, 캠핑장 등을 추가하여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확대(안 제2조제3호)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포함하도록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

다. 폐교재산 무상임대 범위 확대

폐교재산 무상임대 허용 조건을 교육청·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귀농·귀촌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까지 범위 확대(안 제5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16.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29,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동 431-2호, 339-012)

붙임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박물관”을 “박물관, 귀농·귀촌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의 시설, 캠핑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주민”을 “지역주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교재산 활용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교재산을 귀농·귀촌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의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 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 ----- ----- 박물관, 귀농·귀촌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의 시설, 캠핑장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익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 ----- ----- ----- ----- 지역주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단	④ ----- ----- -----.

<신 설>

1. · 2. (생 략)

<신 설>

⑤ (생 략)

만, 제3호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교재산 활용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교재산을 귀농·귀촌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의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소독증대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⑤ (현행과 같음)

5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대학ICT연구센터 선정

- 지능정보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 대학ICT연구센터 2곳 선정
-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발표(3.17) 후속 조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7. 11(월), 지능정보사회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분야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서 「2016년도 대학ICT연구센터」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대학ICT연구센터」 2곳은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3.17일 발표)의 후속 조치로 추가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 지능정보기술 분야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ICT연구센터로 선정된 대학은 고려대, 건국대로, 지난 5월 타 분야별 선정된 8개 대학을 포함해 총 10개 대학이 '16년도 대학ICT연구센터 최종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분야별 선정대학】

분 야	선정대학	분 야	선정대학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고려대	클라우드컴퓨팅	건국대
디지털콘텐츠(VR)	세종대	IoT	서울과기대
전파응용	경희대	정보보안	충남대
ICT+국방	광운대	공공안전/재해예방	전남대
자유공모	아주대, 영남대		

-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분야로 선정된 고려대 ICT연구센터는 「지능정보처리 SW플랫폼의 구축 및 고급인력양성」 과제로,
- 지능의 축적·확장·고정밀화를 위한 딥러닝 기반 지능정보처리 SW플랫폼 구축, 지능형 자율주행차 및 의료전문가 지원 등 지능정보 SW핵심기술 개발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하게 된다.

□ 아울러, 클라우드컴퓨팅 분야로 선정된 건국대 ICT연구센터는 「지능 정보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개발 및 고급인력양성」 과제로,

- 고성능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 기술(이종연동, 고성능화, 지능화, 자동화, 가상화), 3대 융합 응용 제품(감성지능 큐레이션, 지능형 방송제작, 창의융합 교육)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수행하게 된다.

□ 올해 선정된 「대학ICT연구센터」 10 곳은 향후 4년(최대6년)간 각각 연(年) 5~8억원씩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 기업중심 산학협력과제 확대(20% → 30% 이상) 및 Co-Op프로그램* 도입,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 등을 통해 산업수요에 맞는 고급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Co-operative education : 학교수업과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학점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식

□ 미래부 정완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대학ICT연구센터의 선정을 통해 지능정보기술분야의 창의융합형 인재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 창조경제 및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전문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1

2016년도 「대학ICT연구센터」 최종선정 결과

구분	공모분야	선정대학	총괄책임자	연구내용
대 학 ICT 연 구 센터	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	고려대	한재호	지능의 축적·확장·고정밀화를 위한 지능정보처리 SW핵심기술 개발 및 고급인력양성 · 딥러닝 기반 지능정보처리SW플랫폼 구축, 지능형 자율주행차 및 의료전문가 지원등 응용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건국대	김두현	지능정보서비스를 위한 고성능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고성능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5대 핵심 기술, 3대 융합 응용 제품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전파응용	경희대	이범선	LOS/NLOS 환경에서 3차원 선택적 무선전력전송 기술연구 · 다중 배열 송·수신회로, 다중경로 추적 및 빔 합성 기술, 장애물 회피알고리즘 연구 및 구현
	디지털 콘텐츠(VR)	세종대	최수미	모바일 플랫폼 기반 엔터테인먼트 VR기술연구 · VR콘텐츠의 표현/편집/변환/전송 및 고품질 시청각 재생기술등의 핵심요소기술 연구 · 스테레오 드론 기술과 모바일 VR기술을 융합한 콘텐츠 개발
	공공안전 / 재해 예방 ICT	전남대	김진영	도시 재난재해 대응 ICT 융합 시스템 연구 · ICT융합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도시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혁신
	정보보안	충남대	원유재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보호 기술연구 · 안전한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및 금융거래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기술 연구
	IoT	서울과기대	차재상	지능형 산업융합 IoT/IoL개발을 통한 융합형 인력양성 · IoT/IoL(Internet of Lights) 기술을 기반으로 ICT R&D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ICT+국방	광운대	심동규	지능형ICT 국방 감시정찰/경계 시스템 개발 · 초고용량 군 감시정찰 정보를 통합/저장/관리를 위한 플랫폼, 다차원 정보 처리 기술개발
	자유공모	영남대	박용완	글로벌 자동차전자장 부품 기능안전 SW창의인력 양성 · 진단 지원을 위한 데이터 모델링과 초저전력 SoC 기반 능동적 데이터 획득·전송이 가능한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
		아주대	선우명훈	초소형 체내외 진단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 · 자동차 기능안전을 고려한 ADAS기술, 차량용 UI/UX 기술, 차량융통신 및 보안 시스템 기술개발

참고2 대학ICT연구센터 주요현황

□ 개 요

- 대학에 결집되어 있는 석박사급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ICT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문제해결능력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갖춘 고급 연구인력 양성(00~)

< 사업 개요 >

- ◆ 지원규모 : '16년 299억원, 41개 센터(계속 31개, 신규 10개)
※ 센터별 지원기간 및 성과에 따라 매년 5~8억원 수준 차등지원
- ◆ 지원기간 : 4+2년(4년차 평가결과 우수센터는 2년 추가지원, 최장 6년)
- ◆ 지원대상 : 공학 분야 중심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 주요성과

- '00년도부터 ICT분야 R&D연구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 및 신산업 창출 기여
- 인재양성 12,665명*, 특허등록 3,617건, 기술이전 수입 232억원, SCI급 논문 10,400건 등 성과 도출('00~'15년)

* 국내 ICT분야 석·박사 졸업생의 약 14%를 차지

- '15년 연구생산성 15.7%(기술이전 수입료 46.25억원)로 IT R&D 연구생산성 3.98%('13년 미래부) 대비 4배 이상 높은 성과 달성

- 석·박사급 배출인력 만족도* 및 업무적응력**이 비수혜학생 대비 높음

* (배출인원 만족도/업무적응기간) 수혜학생 (90.6점/3개월), 비수혜학생 (75.7점/6.1개월)

< 대학ICT연구센터 주요 성과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배출인력(명)	370	385	469	785	923	975	1,068	645	844	796	900	939	912	931	867	856	12,665
특허등록(건)	33	61	128	100	90	125	244	61	199	171	341	467	476	441	324	356	3,617
기술료(백만원)	-	105	112	101	433	605	751	78	1,076	1,232	1,844	2,044	2,460	4,415	3,294	4,625	23,175
SCI급논문(건)	355	350	690	704	868	1,115	1,180	192	592	567	576	716	704	734	588	469	10,400

6-1 문화체육관광부

당신의 아이디어가 평창문화올림픽을 만듭니다

- 7. 16.~17. '평창문화올림픽'을 주제로 한 예술 해커톤 개최 -

평창올림픽 외국인 관광객에게 강원도 전통시장과 공방 여행(투어)을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창업해볼까? 관광객이 스마트폰에서 즐겨듣는 음악 목록의 취향을 분석해서, 방문 기간 전국의 공연·전시·관광 명소를 추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은 어떨까? 전 세계 성화 봉송의 진행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역사와 지리, 문화를 가르쳐주는 어린이용 교육 애플리케이션을 다국어로 만들어본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해 이렇게 참신한 문화사업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볼 수 있는 해커톤 행사가 7월 한여름, 무박 2일 동안 펼쳐진다.

* **해커톤(Hackathon)**: 무언가에 집중해서 '파고든다'는 의미의 해(Hack)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정해진 시간 동안 팀을 짜서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기획하여 간단한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개발 경진 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11년 7월)를 기념해 오는 7월 16일(토)부터 17일(일)까지 평창문화올림픽을 주제로 한 해커톤을 서울 선정릉의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에서 개최한다.

평창문화올림픽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와 인종,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되는 행사이다. 이번 해커톤은 평창문화올림픽에 대한 문화예술과 정보통신기술(IT)·공학,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세대 참여를 북돋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번 '예술 해커톤: 평창문화올림픽 편'에서는 창작·기획자부터 디자인, 정보통신기술 및 공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팀을 구성, 전문가

멘토링을 받으며, 무박 2일간 콘텐츠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참가자들이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커피와 다과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며, 행사장 발코니에도 야외 휴게 텐트가 설치된다. 공개 발표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3개 팀에는 총 4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지급되며, 특히 최우수팀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상이 수여된다.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에는 평창문화올림픽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되는 기회도 주어진다.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자인 한 참가자는 “그동안 개인 창작 활동만을 주로 해왔는데, 평창문화올림픽이라는 주제와 해커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획 방식이 흥미롭게 느껴져 지원하게 됐다.”라며 참가 동기를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해커톤에서 문화예술과 정보통신기술·공학, 경영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젊은이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평창동계올림픽의 대회 슬로건인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술 해커톤: 평창문화올림픽’의 참여 신청은 7월 10일(일) 오후 11시까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http://www.gokams.or.kr>)에서 하면 된다.

붙임 행사 개요

별첨 포스터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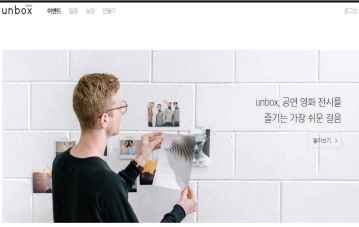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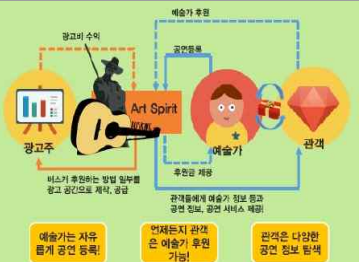
행사 개요

□ <예술 해커톤 - 평창문화올림픽 편> 행사 개요

- 일정 : 2016년 7월 16일(토) - 17일(일), 무박 2일간
- 장소 :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6층 다목적홀 및 선정릉 일대
- 대상 : 문화예술, IT·공학, 경영 등 전문인력
- 내용 : 평창문화올림픽을 만들어 나갈 아이디어 기획·개발
- 상금(포상) : 4백만 원(최우수 2백만 원 1팀, 우수 1백만 원 2팀)
* 최우수팀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상 수여
- 주요일정

시간	7월 16일(토)	7월 17일(일)
07:00-08:00	참가자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아침식사]
08:00-09:00		
09:00-10:00		[아이디어 완성] 해커톤 결과물 제출
10:00-11:00		
11:00-12:00	[아이디어 피칭] 각 팀별 아이디어소개 및 팀 리빌딩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도출 및 선정	피칭 준비
14:00-15:00		[피칭] 팀당 10분 발표 점수 집계 및 심사평 시상 및 폐회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아이디어 개발 ②] 전문가 멘토링 아이디어 구체화	
20:00-21:00		
21:00-22:00		
23:00 ~		

□ <예술 해커톤 - 전통 편> 후속추진 현황

팀명	아이디어 예시	내용 및 후속추진 현황
미드나잇 헤리티지 (최우수)		◆ 프로젝션매핑과 증강현실로 과거건물, 역사적 사건을 구현하는 야간 체험형 디지털 미디어 기반 관광 콘텐츠 ◆ 후속 추진현황 - 크리에이티브 챌린지 플랫폼(CCP) 1기 선정 - 종로 사직단 소재 디지털 미디어제품 개발 중
패트와 매트 (우수)		◆ 백제금동대향로의 오악사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한 우리 소리 찾기 게임 ◆ 후속 추진현황 - 시제품(보드게임, 캐릭터)의 상품화 추진 검토 중
UNBOX		◆ 공연, 전시, 영화 등 예술행사 예매 페이지 개설 서비스 ◆ 후속 추진현황 - 개발 런칭 및 출시 예정
예술혼 전우치		◆ 거리공연 예술가는 후원금을 제공받고, 관객은 다양한 공연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거리공연정보 어플리케이션 ◆ 후속 추진현황 - G-Venture Global@London 선정 - 7월 초 런칭 예정

6-2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전적응 훈련 점검

- 문체부 2차관, '슬라이딩센터' 사전적응 훈련 현황 점검과 선수 격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6월 30일(목),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썰매종목(봅슬레이, 스켈레톤 및 루지) 경기장으로 신축하고 있는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이하 슬라이딩센터)에서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장 사전적응 훈련 현황을 점검하고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선수단을 격려했다.

썰매 종목은 트랙 적응이 중요하고,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이점*이 가장 큰 종목인 만큼, 문체부는 실제 코스에서의 조기 훈련 지원을 통해 메달 획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이 가능한 실내 아이스스타트 훈련장부터 개방하여 국가대표팀의 경기장 사전적응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두 번째 썰매 경기장인 슬라이딩센터는 현재 83%의 공정률로 건설되고 있다.('17년 12월 준공 예정)

* 2014 소치올림픽에서 러시아는 봅슬레이·스켈레톤 종목에서 '썰매 최강국' 독일을 제치고 가장 많은 금메달(3개) 획득

이용 봅슬레이·스켈레톤 총감독은 “국내에는 마땅한 훈련시설이 없어 국가대표팀은 야외에서 바퀴 썰매 등을 통해 스타트 훈련을 해 왔으나, 이번 실내 아이스스타트 훈련장 신설을 계기로 실제 경기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어, 스타트 기록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김 차관은 최근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원윤종 선수(봅슬레이)와 윤성빈 선수(스켈레톤) 등 국가대표 선수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국내 썰매 종목의 척박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 선수단을 격려하고, “썰매 종목의 선수 육성과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체부는 썰매 종목의 선수 육성과 훈련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오는 10월부터는 슬라이딩센터 본트랙에서의 사전 적응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썰매 종목 올림픽팀 운영과 전주자* 육성, 세계 최상급 외국인 전문가 영입 등 썰매 종목의 선수층 확보와 함께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주자: 대회 시 실제 참가 선수들보다 앞서 출발하여 코스, 경기장 정비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경기 운영 인력

김 차관은 썰매 종목 외 다른 종목의 훈련 지원에 대해서도 “올해 12월 까지 주요 경기장을 조기 완공하여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 대회 전까지 충분히 훈련하고 경기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김 차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 1년 반을 앞둔 시점에서 올림픽 방송시설로 신축하고 있는 국제방송센터(IBC)와 올림픽 개·폐회식장 등의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등, 올림픽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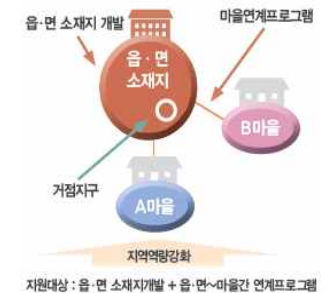
7-1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15개 시·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본격 추진

- 과소화 마을 증가에 대응, 15개 읍면 소재지의 중심지 기능 확충 및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15개 시·군의 2015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과소화 마을¹⁾ 증가에 대응하여, 농촌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 등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개요>

○ 농식품부는 ‘15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시범사업으로 15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15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 1,200억원(국비70%, 지방비30%)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난 1년간 전문

1) 과소화마을(가구 수 20호 미만 마을) : ('05) 2,048개 → ('10) 3,091개

가 자문단(중앙계획지원단 40명)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최근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 15개 대상지: 광주시 곤지암읍, 홍천군 홍천읍, 영월군 영월읍, 괴산군 사리면, 금산군 금산읍, 서천군 장항읍, 임실군 임실읍, 고창군 흥덕면, 광양시 옥곡면, 강진군 성전면, 고령군 다산면, 칠곡군 북삼읍, 거창군 거창읍, 합천군 합천읍, 서귀포시 대정읍

□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과거 인프라 중심의 읍면 소재지 개발 사업과 달리 배후마을 주민을 고려한 중심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배후마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강화된다.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 금산군 금산읍의 경우 금산시장, 다락원, 금산 문화의 집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읍소재지의 경제·문화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 주민이 움직이는 다락원 버스를 통해 읍내에서 장보기, 보건소 이용, 문화·복지프로그램 수강을 꾸러미로 제공받을 수 있고 문화배달부(3년간 100여명 양성)를 통해서도 배후마을에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배달해나갈 계획이다.

○ 거창군 거창읍은 10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된 곳으로 학교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보행로를 확장하고 공동체 마당 등 쾌적한 교육·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중심지의 교육·문화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농업교실, 아카데미 텃밭교실 운영을 통

해 배후마을 주민과 학생이 균등한 품질의 교육·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 칠곡군 북삼읍은 칠곡군의 인문학 도시 조성과의 연계하여 평생학습복지센터 리모델링, 북삼 인문학 거리 및 인문학 광장 조성을 통해 읍소재지의 교육·문화·복지 기능을 확충하고,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후 인문학 체험프로그램과 배후마을로 찾아가는 문화·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 영월군 영월읍은 영월역 관광안내센터를 개설하여 배후농촌 마을들에 대한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배후마을의 관광객 유치 확대하고, 농산물 전시·홍보관을 신축하여 배후마을의 작목반들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특산물의 전시와 홍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광주시 곤지암읍, 홍천군 홍천읍은 각각 5일장 주민참여존 설치, 인근마을 주민들을 위한 농산물 저장공간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배후마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5일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15년에 착수한 15개 선도지구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자문 및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추진되는 읍면 대상 지역개발사업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16년에 신규로 착수하는 2차 18개 지구에 대해서도 지구별 프로젝트 매니저(PM) 구성, 중심지 포럼 운영, 100인 토론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 체감형 중심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18개 대상지 : 세종시 전의면, 여주시 가남읍, 평창군 대관령면, 양양군 양양읍, 음성군 음성읍, 단양군 매포읍, 청양군 청양읍, 예산군 덕산면, 남원시 운봉읍, 진안군 마령면, 담양군 대전면, 무안군 무안읍, 영천시 금호읍, 의성군 의성읍, 성주군 성주읍, 함안군 가야읍, 하동군 하동읍, 제주시 구좌읍

참고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사업 주요 내용

	지구명	주요 내용
1	곤지암읍 (광주시)	·사통팔달 이점을 이용하여 광주시 남부권의 복지·문화 거점 기능을 부여하고, 사회적 경제를 적극 발굴하며, 주민 체감형 복지·문화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원활히 전달
2	홍천읍 (홍천군)	·농촌 활력센터를 중심으로 홍천읍이 보유한 지역관광 자원과 지역 인력(노인 및 취약계층)을 활용하여 읍소재지의 문화·경제 기능을 확충하고, 주민 체감형 문화·경제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원활히 전달
3	영월읍 (영월군)	·영월읍이 보유한 관광자원과 지역 인력을 활용하여 읍소재지의 문화·복지·농촌관광기능을 확충하고, 주민 체감형 문화·복지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원활히 전달
4	사리면 (괴산군)	·주니어센터(교육·보육)와 생태교육, 사리면이 보유한 인문학 자원과 지역 인력을 활용하여 면소재지의 교육·문화 기능 확충을 지원하고, 주민 체감형 교육·문화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원활히 전달
5	금산읍 (금산군)	·금산읍이 보유한 전통시장, 약초시장, 다락원, 문화의 집 등 자원을 활용하여 읍소재지의 경제·문화 기능을 확충하고, 주민 체감형 문화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원활히 전달
6	장항읍 (서천군)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가생태산업단지 등과 장항읍내 근대역사문화 자원과 지역 인력을 활용하여 읍소재지의 역사·문화 기능을 확충하고, 주민 교육·체험·관광·문화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원활히 전달
7	임실읍 (임실군)	·임실읍이 보유한 문화복지시설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여 읍소재지의 문화·복지 거점기능을 확충하고, 주민 체감형 문화·복지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원활히 전달
8	흥덕면 (고창군)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인 등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흥덕면 뿐만 아니라 고창 북부권 지역주민들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9	옥곡면 (광양시)	·문화·복지공간 연계, 복합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중심지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개선과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10	성전면 (강진군)	·성전면이 보유한 역사문화 자원과 지역 인력을 활용하여 면소재지의 문화 기능을 확충하고, 주민 체감형 복지·문화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원활히 전달
11	다산면 (고령군)	·행정복합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행정·문화·의료·복지 연계 서비스 확충하고, 정주환경 개선 및 농촌 거점공간 조성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배후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을 통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전달
12	북삼읍 (칠곡군)	·칠곡군의 인문학 도시 조성과 연계 북삼읍이 보유한 인문학 자원과 지역인력을 활용하여 읍소재지의 교육·문화·복지 기능을 확충하고, 주민 체감형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배후마을에 원활히 전달
13	거창읍 (거창군)	·초중고(10개교) 타운을 중심으로 거창읍이 보유한 교육·문화 인프라 개선과 지역 활동가 육성을 통해 중심지의 교육·문화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교류를 강화하여, 균등한 품질의 교육·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14	합천읍 (합천군)	·창조문화교류센터, 대아성 등 합천읍이 보유한 역사자원과 문화자원, 지역 인력을 활용하여 읍소재지의 교육·문화 기능을 확충하고, 합천읍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
15	대정읍 (서귀포시)	·주민들의 문화·복지·교육 등 생활서비스 수요 충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대정읍의 역사·문화·경관·농산물 등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농촌 경제활동의 다각화, 일자리 창출

7-2 농림축산식품부

여름 휴가철 이전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추진
 - 7.7~7.22기간 중 전국 873개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으로
 농촌환경개선 활동 실시 -

《 주 요 내 용 》

◇ 본격 여름 휴가철(7월말~) 이전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추진

- 농촌체험휴양마을(873개소) 대상으로 집중추진기간(7.7~7.22)을 설정하여 주민 주도의 농촌환경개선 활동에 지역농협, 새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운동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7월말부터 본격 실시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를 위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운동은 전국의 873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 행사(7.7)를 기점으로 본격 휴가실시주간 이전인 7.22일까지 집중추진기간을 설정하여,

- 농촌 주민의 주도하에 지역농협, 새마을회 조직 등이 참여하여 마을 쓰레기 줍기, 폐비닐 수거 등 **농촌클린운동**을 실시하고 농촌체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은 농촌 주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마을 주변의 생활공간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꽃·묘목 식재 등 경관을 조성하는 환경개선 활동이다.

- 지난 ‘13년부터 시작한 동 운동은 **금년**에는 집중추진기간(3~5월) 중

중앙부처간 협업(농식품부 - 행정자치부) 및 마을주민, 기업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하에 **1,208개 읍면, 9,196개 마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마을가꾸기 등을 추진하였다.

* 참여 마을 개수 : (‘13) 427 → (‘14) 807 → (‘15) 5,390 → (‘16) 9,196

□ 금년도 집중추진기간 중 나타난 동 운동에 대한 성과와 관심을 연중 지속적인 농촌생활환경 개선 운동으로 유지하고,

- 여름 휴가철 이전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주도의 동 운동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치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특히, 금번 운동에는 지역농협과 새마을회 지역 조직이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참고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활성화를 위해 지난 5.3일에 농협중앙회 - 새마을운동중앙회 간 협약을 맺은바 있다.

□ 농식품부는 앞으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해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농촌의 소득경관 등 분야의 주민주도 마을가꾸기를 평가하여 우수마을 시상(금년 3차, 831)

- 행정자치부의 행복홀씨입양사업, 환경부의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 **유관기관 사업과의 연계성도 강화**하여 연중 지속적인 농촌생활환경 개선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복홀씨 입양사업 : 공원, 유원지, 지역명소 등 일정구간의 청소, 꽃가꾸기 등을 지역주민 및 단체에 입양하여 관리

- 농식품부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지원이 중요하며,
-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 및 지자체, 관련 기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8 환경부

7월 8일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
 - 오늘(7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

- 환경부는 내일(7월 8일)부터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 이것은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오늘(7월 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되었다.
-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 휘발유차 레이(1,700만원)와 전기차 레이(3,500만원)를 구매할 경우의 가격차가 없어지게 되었다.
 - *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음
- 이번 조치는 7월 7일 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7월 8일 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상향 이외에 전기차 구매 물량도 기존 8,000대에서 10,000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현행) 8,000대(1,200만원) → 10,000대(1,400만원)
 - ** 단, 10,000대 중 전기버스 100대는 종전대로 1억원 정액 지원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만들기」 4가지 공동캠페인 추진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저출산해소를 위해 여성 생애주기별 지원강화
민관이 힘을 합쳐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한다!

— 6.30(목), 제2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최 —

- ① 휴가 떠날 때 휴가사유 달지 마세요!
- ② 근무시간 외에는 업무와 관련된 전화, 문자, 카톡하지 말아요!
- ③ 일·가정 양립을 응원하는 말(권장어) VS 구박하는 말(기피어)
- ④ 기업 CEO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실천합시다!

□ 일·가정 양립문화의 소사회적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이 힘을 모아 4개의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만들기” 민관공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 또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해소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목) 서울고용센터에서 관계부처, 경제5단체, 여성경제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고영선) 주재로 「제2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안건) ①부처별 일·가정 양립 관련 주요과제 추진계획, ②경제5단체별 일·가정양립 추진계획(한국기업 유연근무 도입실태 조사결과 포함), ③민관 합동 “일·가정 양립 공동캠페인” 추진계획

- 민관협의회는 ‘저출산 극복 동참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 (‘15.12.15)을 통해 제시한 “일·가정 양립”이 현장에 착근하고 개별 기업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지역 단위에서 구성·운영 중이다.

<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개요 >

- (중앙) 고용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경제단체, 여성경제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구성·운영(‘16.3월~, 분기 1회)
 - ▲ (구성) 고용부차관(주재), 기재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국장, 경제5단체 본부장(상무), 여성경제인단체장 및 민간전문가
 - ▲ (기능) 일·가정양립 실천현황 모니터링, 우수 모범사례 공유·확산, 민관합동 캠페인 추진, 제도 개선 수요 파악, 협업과제 발굴·논의 등
- (지역) 지방관서(47개) 기관장 주관으로 관내 지자체, 노사단체, 유관기관 (새일센터 등),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자율구성(‘16.6월~, 월 1회)
 - ▲ (기능) 지방관서별로 ①일·가정 양립 과제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②현장 홍보 및 확산 총괄관리

□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4대 공동캠페인으로서 ①휴가사유 없애기, ②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카톡 사용자제, ③5가지 일·가정양립 저해어와 권장어 선정·공유, ④CEO 직접참여 기업문화 개선 등을 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휴가사유 없애기 캠페인”은 휴가신청시 사유를 적는 것은 사내논치를 보게 하는 대표적인 사유중의 하나로, 이를 없애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일·가정양립을 실현하자는 상징적 취지의 캠페인이다.

(2) “근무시간 외 응답문자 캠페인”은 근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이 왔을 때 이를 개인차원에서 거부하는 경우 무례하게 비취지는 등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기관차원의 공동 응답 문자 등을 개발·활용하자는 것이다.

* (문자 예)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 연락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상 부득이 응답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무시간에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5가지 일·가정양립의 저해어와 권장어 선정 이벤트”는 일·가정 양립을 권장하거나 저해하는 직장언어, 사자성어, 신조어 등을 이벤트 형식으로 공모·선정하여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환기시키는 캠페인이다.

- * (예시) 응원하는 말(권장어): ①퇴근할 때 인사하지 맙시다!, ②휴가좀 써!, ③Everyday 가정의 날, ④(육아로 다소 늦었을 때)애보기 힘들지? 등
- 구박하는 말(저해어): ①(갑작스런 회식 제안과 함께) 저녁만 먹고 가, ②(휴가 결재시) 휴가가서 뭐 할려고?, ③(퇴근하며 업무 주면서) 내일 아침에 보자! ④(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면서) 김대리, 승진해야지! 등

(4) “CEO 참여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은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기업문화 개선의 핵심주체인 CEO가 직접 참여*하여 ① CEO 실천선언 영상홍보, ②중소기업 CEO 등의 릴레이 동참, ③ 사후확산 등의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는 것이다.

- * 국내 100개 기업 대상 기업문화 진단 결과, 상습적 야근·비효율적 회의 등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열쇠로 ‘CEO의 인식과 의지’ 제시 (한국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 종합보고서(’16.3월, 대한상의·맥킨지))

□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 및 경제단체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함께 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육아기 대체인력채용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특히,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및 일·가정 양립의 획기적 인식개선을 위해 남성의 1~3개월 단기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동참을 유도하고, 정부는 남성육아휴직이 0명인 부진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선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하였다.

- * 독일·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2~3개월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육아휴직 이후에도 남성이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인식 전환의 중요단계로 작용(독일의 경우, ’06년 3%에서 ’13년 32%로 남성육아휴직비율이 증가)

- * ’15년 한해 우리나라 남성육아휴직자(4,872명)의 평균휴직기간은 8개월(남녀 모두의 평균 육아휴직기간은 9.8개월)이고 정부는 ’14.10월부터 남성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아빠의 달”: 부모순번휴직시 두 번째 휴직부모의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상향지급) 시행 중

○ 또한 ①중소·중견기업 대상 분기별 대체인력 수요조사를 통한 대체인력연계 활성화, ②국민행복카드* 정보와 고용보험 근로자정보를 연계하여 얻어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간 총 500개 사업장의 모성보호 등 근로감독 및 법위반 정도가 심한 30개소 내외의 사업장 기획감독, ③올해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60%까지 제고 및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을 위한 사업주 대상 hot-line 설치(직장보육지원센터) 등도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 * 모든 임신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본인 부담분)를 50만원까지 지원(건강보험 급여)

- ** 근로자 500인 이상 및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15년 52.9%→ ’16년 60%→ ’17년 70%→ ’20년 80%로 의무이행 추진계획

□ 고영선 고용부차관은 “전일제 위주의 조직문화와 장시간 근로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과 이번 민관공동캠페인을 통해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각종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제2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요
2. 경제계 실천선언문(15.12.15 발표)
3. 민관합동 공동캠페인 개요

참고 1

제2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요

- ☐ 일시: '16.6.30(금), 10:00 ~ 11:30 (90')
- ☐ 장소: 서울고용센터 5층 웰컴룸
- ☐ 참석대상: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위원(16명)
- ☐ 안건
 - 일·가정양립 관련 주요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 경제단체별 일·가정양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7월 세부 홍보계획
 - 민관합동 “일·가정 양립 공동캠페인” 계획
- ☐ 세부일정 (외부 비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0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고용부 이재국 서기관)
10:05~10:10 (05)	▪ 인사말씀	고용부 차관
10:10~10:40 (30)	Part 1. 안건 설명	
	① 일·가정 양립 주요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8)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여가부 여성정책과장
	② 경제단체별 일·가정양립 추진계획(15) - 7월 세부 홍보계획(2)	경제 5단체(각3분) 경총
	③ 민관합동 “일·가정 양립 공동캠페인” 계획(5)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여가부 여성정책과장
10:40~11:30 (50)	Part 2. 안건 토의	
	▪ 발제 안건에 대한 토의(45)	고용부 차관 주재
	▪ 정리 및 마무리말씀(5)	고용부 차관

<붙임>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위원 명단

구 분		위 원	
		이름	직책
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위원	정 부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백용천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정충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경 영 계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상무)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상무)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상무)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상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찬재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장
	학 계	권 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문 가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

지난 30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계는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기업·개인이 다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바탕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근로자들이 가정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출산·육아를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직장 내 보육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발 맞추어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기업간 상생 노력, 지자체와의 협업 노력으로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들에 편중된 육아·가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경제계 선언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민관합동 협의 채널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I “휴가사유 없애기” 캠페인

1 주요내용

- (개요) 휴가신청 시, 사유를 적는 것은 사내눈치를 보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 이를 없애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일·가정양립을 실현하자는 취지의 상징적 활동으로 **민관합동 공동캠페인** 실시
- (슬로건) **눈치 보지 말고, 휴가 갑시다! 휴가사유 적어야 하나요?**

2 추진현황

- (사전조사) 경제5단체가 직장인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16.6월), “직장인 10명 중 3명(31.7%)은 휴가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낸 경험”이 있으며,
 - “휴가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휴가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는 것(54.2%)으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41.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 * (부정적 응답) 휴가 사유기재는 휴가사용과 관계없다 22.2%, 휴가사용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1%

3 향후계획

-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민관합동으로 휴가 사용시에 ‘휴가사유’를 없애는 실천운동 및 합동 퍼포먼스 추진
 - (실천운동) 공공부문은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과 협의를 통해, 민간부문은 경제5단체와 함께 실천운동으로 전개
(‘16.7월~10월, **붙임** 참조)
 - (성과발표) 활동성과는 일·가정양립 컨퍼런스 등에서 **발표·공유**(~'16.12월)



II “근무시간 외 응답문자” 캠페인

1 주요내용

- (개요) “근무시간 외 응답문자 캠페인”은 근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이 왔을 때 이를 개인차원에서 거부하는 경우 무례하게 비춰지는 등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 기관차원의 공동 응답 문자 등을 개발·활용*하자는 캠페인을 추진
- * (문자 예)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 연락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상 부득이 응답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무시간에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프랑스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직장 상사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나 메시지, 이메일 등을 받지 않을 권리, 이른바 “연락받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 개정안에 포함(‘16.3월 의회제출, ’16.7월 입법 추진)
- (국내사례) LG U+는 ①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금지, ② 휴일 업무지시 금지 등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상급자에 대해서 보직해임한다는 지침을 전 부서에 시행

2 추진현황

- (시범실시) 고용부 내부 메시지로 활용하는 등 시범실시 중(6월)
- (온라인홍보) 카드뉴스제작 온라인홍보 추진 중(6.15~)

3 향후계획

- (라디오 홍보) 출·퇴근시간 직장인이 많이 듣는 라디오를 통한 홍보
* 라디오 홍보에 따른 예산협의 중
- (공동캠페인)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과, 민간부문은 경제5단체와 함께 “응답문자 공동캠페인”을 추진(‘16.7월~10월)

III ‘5가지 일·가정 양립 저해어와 권장어 선정 이벤트

1 주요내용

-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직장언어 및 사자성어, 권장하는 신조어 및 사자성어 등을 이벤트 형식으로 공모·선정하여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환기시키는 캠페인
- * (예시) 응원하는 말(권장어): ①퇴근할 때 인사하지 맙시다!, ②휴가좀 써!, ③Everyday 가정의 날, ④(육아로 다소 늦었을 때)애보기 힘들지? 등
구박하는 말(저해어): ①(갑작스런 회식 제안과 함께) 저녁만 먹고 가!, ②(휴가 결재시) 휴가가서 뭐 할려고?, ③(퇴근하며 업무주면서) 내일 아침에 보자! ④(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면서) 김대리, 승진해야지! 등

2 추진현황

- 일·가정 양립 홈페이지(worklife.kr) 및 페이스북을 연계한 공모이벤트 실시 중(6.21~7.15, [붙임](#) 참조)

3 향후계획

- (선정이벤트) 공모된 권장어·저해어를 대상으로 선정이벤트를 추진(7월말~8월)
- (홍보 등 활용) 선정된 문구 등은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고용부 등 정부부처 블로그 및 SNS, 경제5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파 및 각종 홍보시 활용(8월~)



1 추진 방향

-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기업문화 개선의 핵심주체인 CEO가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을 기업·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집중 전개
 - ※ 슬로건(안) “일·가정 양립, 이제 기업의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 ※ 국내 100개 기업 대상 기업문화 진단 결과, 상습적 야근·비효율적 회의 등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열쇠로 ‘CEO의 인식과 의지’ 제시 (한국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 종합보고서('16.3월, 대한상의·맥킨지)

2 추진현황 및 계획

(1단계) 6월	(2단계) 7월	(3단계) 8월
사전붙임	온라인 캠페인	사후확산
CEO / 셀럽 실천선언 영상 제작·확산 * SNS, SMR 광고 등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 * 중소기업 등 실천선언 릴레이 동참 * 대국민 대상 확산 홍보	해피빈 캠페인 성과 활용 온라인 홍보 시행 * SMR 광고, 온라인 PR패키지 (카드뉴스, 뉴스레터, 웹포스터 등)

- (1단계(사전붙임)) CEO 일·가정 양립 실천선언 영상 홍보(6~7월, 온라인)
 - 여성인재활용 TF 참여기업(대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중소기업) CEO 실천선언, 유명인 영상 제작 및 온라인 등 사전 붙임 홍보
 - ※ (동영상 참여기업 CEO 등) 엘지전자, 케이티, 포스코, 한화생명, 매일유업, 배우 채시라 등 9인 (붙임 참조)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실천메시지】

- △ [정시퇴근]이 행복한 출근을 만듭니다 △ [회의]는 짧게, [소통]은 깊게!
- △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한 변화, 직원에게 [행복]을 회사에는 [성장]을!
- △ 육아휴직은 배려가 아닌 [부모의 권리]입니다' 등

○ (2단계(본캠페인)) 네이버 해피빈 활용 캠페인(7.6~8.5)

- (중소기업 확산) 중소기업 CEO 등 일·가정 양립 실천선언 릴레이 동참 및 대국민 확산 캠페인(댓글 이벤트) 등 추진
- (옥외광고) 도심 랜드마크를 활용한 옥외광고(대형현수막 게시)를 병행, 일·가정 양립에 대해 직장인과 경영진에 긍정적 메시지 전파 (6.27~7.10)

※ 광화문 KT / 강남 포스코 사옥에 대형 현수막 게시 (메시지: 늘 곁에 있어 가족이지만, 늘 그리운 것도 가족입니다. 일·가정 양립 같이 있어야 가치있습니다.)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 CEO편 회사는 잘게, 소통은 길게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에 동참한 기업과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동참 기업 더 보기	
(LG전자 사장 조성진) <1단계> CEO 실천선언 영상 홍보	<2단계> 중소기업 CEO 등 릴레이 동참	도심 랜드마크 옥외광고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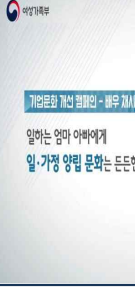
○ (3단계(사후확산)) 기업, 근로자 중심 캠페인 성과 홍보 (8월)

- 동영상 광고(SMART MEDIA RAB), 온라인 카드뉴스·뉴스레터 등 배포

붙임

CEO 캠페인 영상안

□ 일·가정 양립 기업 문화 개선 CEO 실천 선언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 CEO편 회사는 잘게, 소통은 길게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 CEO편 리더의 명확한 지시가 똑똑한 직원을 만듭니다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 CEO편 육아휴직은 배려가 아닌 부요의 권리입니다
LG전자 사장 조성진	포스코 사장 황은연	KT 사장 임헌문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 CEO편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한 변화, 직원에게 행복을 회사에는 성장을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 CEO편 성별 구분 없는 공정한 평가가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 CEO편 아빠의 육아휴직, 가정과 기업이 행복해 집니다
한국BM 대표이사 제프리로다	한화생명 사장 차남규	매일유업 대표이사 김선희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 CEO편 일과 가정의 조화 가정의 행복이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 CEO편 아빠의 육아휴직, 가정과 기업이 행복해 집니다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 배우 제시카편 일하는 엄마 아빠에게 일·가정 양립 문화는 든든한 힘
지비스타일 대표이사 박용주	문화프로덕션 도모 대표 황운기	배우 채시라

“남녀가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행복과 기업성장”

- 2016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

- 사회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결의
- 미국 워싱턴주 대한부인회 설자 위닉 등 양성평등 유공자 훈장 수여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016년 양성평등주간(7.1~7.7)을 맞아 7월 4일(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남녀가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가족행복과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를 주제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 이날 기념식은 강은희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여성단체 지도자, 기업 대표, 양성평등향상 유공자 및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박용주 회장(GB스타일 대표이사)이 ‘일·가정 양립,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라는 주제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전략으로써 가족친화경영과 기업문화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 박 회장은 민·관 합동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이하 태스크포스)* 출범 후 2년 간 남성 육아휴직 비율 증가** 등 참여 기업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성과에 대해 소개하고,

- 중소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회원사들의 가족친화 인증제 동참 협력 계획 등에 대해 밝힌다.

○ 기념식에서는 또한, 기업 CEO와 여성계 대표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남녀가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행복과 기업성장”

- 2016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

- 사회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결의
- 미국 워싱턴주 대한부인회 설자 위닉 등 양성평등 유공자 훈장 수여
 - *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142개의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 모여 '14년 6월 구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양성평등 민·관 태스크포스

** 태스크포스 참여기업(기관)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13년) 4.8% ⇒ ('15년) 7.4% ('16년 태스크포스 참여기업·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참여한 가운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육아휴직 활성화와 재택근무 도입 등 ‘기업의 인식개선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결의’를 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미국 워싱턴주 대한부인회 설자 위닉 자문 이사(국민훈장 동백장), (사)여성중앙회 한춘희 회장(국민훈장 목련장), 강원대학교 조석희 부교수(녹조근정훈장) 등이 양성평등 향상에 기여해 온 공로로 훈장을 받는다.

○ 설자 위닉 씨는 미국에서 1972년 대한부인회를 설립한 이후 타코마 지역에 한국 도서관과 한국어 학교를 건립하여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한인 여성 이민자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었고, 미국 전역 90여 개 공립학교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주역을 맡았으며,

- 피얼스 카운티 복지국 이사를 맡으며 미국 주류 사회의 각종 단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매년 15만명, 연인원 400만 명의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 간병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헌하는 등 대한부인회의 위상을 높이고 수혜자들에게 한국 여성의 이미지를 제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 한춘희 씨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과 (사)여성중앙회 회장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한 공으로, 조석희 씨는 여군 장교로 재직 시 사관학교 여생도 입교 등에 앞장서며 군대 내 양성평등 의식 향상과 여군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훈장을 받는다.

- 한삼섭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중앙본부 부회장은 국민포장을, 김봉옥 충남대학교 병원장은 근정포장을 받으며, 이 밖에도 52인과 단체 3개 기관에 대통령표창(개인 6명, 단체 1개 기관), 국무총리 표창(개인 7명) 및 여성가족부장관 표창(개인 39명, 단체 2개 기관)이 수여된다.

□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없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상대성(性)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민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아울러,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해 가족이 행복하고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 한편, 올해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도 양성평등 사진·아이디어 공모전, 일자리 박람회, 세미나,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붙임】 1. 2016년 양성평등주간 행사 개요

2.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포상 대상자 공적 요약
3.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출범 3주년 주요 성과
4. 정부·지자체 등 양성평등주간 주요 행사 현황

붙임 1

2016년 양성평등주간 행사 개요

□ 추진 배경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매년 7.1.~7.7.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 가족친화기업들과 함께 일·가정양립 실천결의 및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 일시 : 2016. 7. 4.(월) 14:00~15: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참석 : 여성가족부장관, 국회의원, 여성단체 및 기업체 대표, 양성평등향상 유공자 및 가족 등 약 500여명
- 슬로건 : 남녀가 함께하는 일·가정양립, 가족행복과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 기념식 주요내용

- (부대행사) 양성평등 국민참여 사진공모전, 디자인공모전 수상작 전시
- (식전행사) 축하 공연, 홍보영상 상영
- (본행사) 개회사, 축사, 주제영상 상영, 양성평등향상 유공자 포상, 일·가정양립 성과·사례발표 및 실천결의

※ <민관협력을 통한 일·가정 양립 성과 및 사례 발표>

“일·가정 양립,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 경제계 민관 협력 활동 및 가족친화경영 성과, 중소기업 등 현장 우수사례 발표
- *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등 경제계 활동 성과, 중소기업의 실천 노력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향후 민관협력 계획 등 발표
- * 기업의 경영혁신 전략으로서 ‘일·가정 양립’ 실천과 기업문화 개선 필요성 강조

붙임 2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포상 대상자 공적 요약

□ 개 요

- 공적분야 : 양성평등향상 유공
- 정부포상 인원 : 총 60명
 - 훈·포장 : 총 5명(훈장 3명, 포장 2명)
 - 대통령 표창 : 총 7명(1개 단체 포함)
 - 국무총리 표창 : 총 7명
 -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 총 41명(2개 단체 포함)

□ 훈장(3명/국민훈장동백장 1, 국민훈장목련장 1, 녹조근정훈장 1)

- 설자위닉 워싱턴주 대한부인회 자문이사, 한춘희 (사)여성중앙회회장, 조석희 강원대학교 부교수

순번	소속 및 직위	성명	수공기간	공적요약	비고
1	워싱턴주 대한부인회 자문이사	 설자위닉 (여, 74)	40년	○ 미국에서 1972년 대한부인회를 설립한 이후 타코마 지역에 한국 도서관과 한국어 학교를 건립하여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한인 여성 이민자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었고, 미국 전역 90여 개 공립학교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주역을 맡았으며, ○ 피얼스 카운티 복지국 이사를 맡으며 미국 주류 사회의 각종 단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아 매년 15만명, 연 인원 400만명의 저소득층과 독거 노인들을 위한 급식, 간병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헌하는 등 대한부인회의 위상을 높이고 수혜자들에게 한국 여성의 이미지를 제고	국민훈장 동백장
2	(사)여성중앙회 회장	 한춘희 (여, 64)	46년	○ 33년간 농업중앙회에 근무하면서 여성 사회교육 교과개발, 여성 단체 지원,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농협법 개정 등에 기여하였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여성중앙회와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 푸른성북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여성 능력개발과 일·가정양립 지원 프로그램 개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함.	국민훈장 목련장

순번	소속 및 직위	성명	수공기간	공적요약	비고
3	강원대학교 부교수	 조석희 (여, 57)	33년	○ 육군여군장교로 재직 시 임신제도, 육아휴직, 사관학교 여성도 입교, 여군인력 활용확대 2020 마스터플랜 작성 등의 양성평등 의식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전역 후 국방여성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미래군을 선도할 국방여성인력의 역량강화, 정책제언 및 예비역의 일자리 창출, 양성평등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함	녹조근정훈장

□ 포장(2명/근정포장 1명, 국민포장 1명)

- 한삼섭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중앙본부 부회장, 김봉옥 충남대학교병원 원장

순번	소속 및 직위	성명	수공기간	공적요약	비고
1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중앙본부 부회장	 한삼섭 (여, 78)	40년	○ 40년간에 걸쳐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에서 활동하면서 여성조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참정권 획득과 인권차별 철폐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재외국민의 인권회복과 권익신장에 기여하였음	국민포장
2	충남대학교병원 원장	 김봉옥 (여, 62)	28년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국립대병원장으로서 충남대병원 내에 소아암환자를 위한 병원학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센터 및 장애어린이를 위한 낮병동을 개설 운영하였고, 직원 채용, 교육과 승진과정에서 여성인재를 육성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운영하는 등 아동·여성 및 장애인을 보호하여 권익신장에 노력하고, 한국여자의사회장으로서 여의대생과 젊은 여의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의사의 일·가정양립에 기여하였음.	근정포장

□ 대통령 표창(개인 6, 단체 1), 국무총리 표창(개인 7)

훈격	소 속	직위(직급)	성명
대통령	(주)나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나은경
	한국방송공사	스포츠기자	정재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정책연구실장	김경희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한명옥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충남지회	회장	한정숙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변민선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단체	
국무총리	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장	정종혁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	우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팀장	이경아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정미희
	인천광역시청 여성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권후자
	전라북도 김제시청	지방행정주사	김홍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	전병열

붙임 3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출범 3주년 주요 성과

□ 구 성

- 우리나라 주요 민간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자체, 정부 등이 세계 경제 포럼 (WEF)과 협력한 **민관합동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구성·운영('14.6.17출범)

*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등 5개 경제단체 및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 143개 주요 기업·기관이 참여한 우리나라 최초의 양성평등 민관 태스크포스 ('16.6월말 기준)

□ 주요 활동 성과

- 일·가정 양립 확산 및 여성인재 활용을 위한 **‘자발적 실천(민간)-맞춤형 이행지원(정부)’ 방식 민관협력 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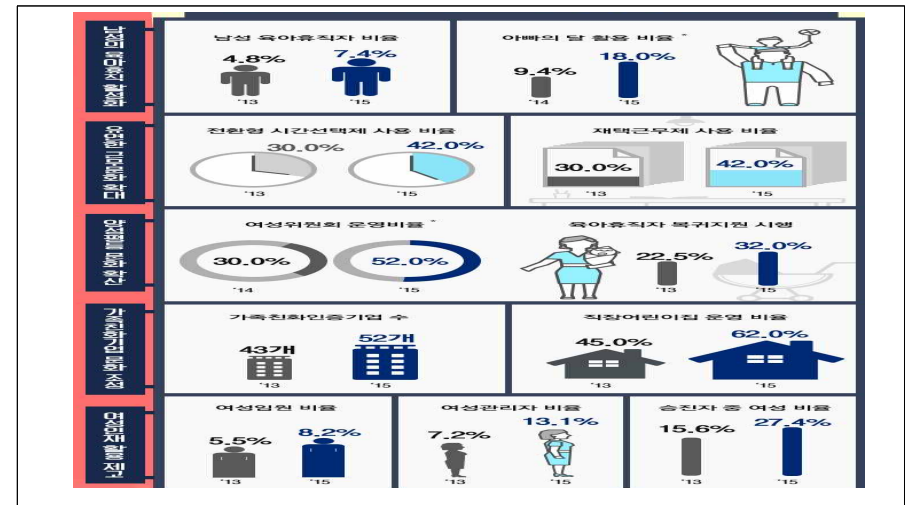
* 참여기업·기관: ('14년) 117 → ('16년) 143개

* 세미나·포럼·성과보고·현장방문·UCC 공모전 등 통해 80여건의 우수 사례 발굴·홍보

- '16년 여성인재 활용을 통한 저출산·저성장 극복을 위해 **‘5대 핵심 실천과제’**(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선언('15.12) 연계) 중점 추진

* ①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②가족친화기업문화 확산 ③일·가정 양립 모범사례 공유 확산 ④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⑤육아휴직 장려세미나(격월)

<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운영성과 ('16년 TF 참여기업 설문결과) >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구성원 (143개)

< '16. 6월 말 기준 >

● 민간기업 (56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구글코리아(유)	(주)국민은행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금호아시아나그룹	네이버(주)	(주)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주)
대한제강(주)	동부그룹	동화세상에듀코	(주)두산
두산코리아주식회사	디아지오코리아(주)	롯데그룹	매일유업(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베인앤드컴퍼니	보우실업	삼성전자
(주)삼천리	신세계그룹	(주)아모레퍼시픽	(주)우리은행
유한킴벌리주식회사	(주)랜드윌드	카카오	(주)케이티
코오롱그룹	포스코	푸르덴셜생명보험	(주)폴무원
(주)한경희생활과학	(주)한국고용정보	(주)한국씨티은행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
한국지엠 (주)	한국화이자제약	한라그룹	(주)한솔케미칼
한진그룹	한화그룹	현대그룹	현대백화점그룹
현대자동차(주)	현대중공업(주)	홈플러스주식회사	호성아이티엑스(주)
CJ그룹	GS그룹	KB국민카드	(주)KT&G
LG그룹	LS산전(주)	OCI(주)	SK이노베이션(주)

● 공공기관 (23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주)	한국남동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공사(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 민간단체 (20개)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공공단체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연구기관 등 (8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19개)

강릉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김제시	김포시	남원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동해시	보령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시흥시	안양시
양산시	원주시	전라북도	

● 정 부 (17개)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붙임 4

정부·지자체 등 양성평등주간 주요행사 현황

□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참석대상(명)	주요내용
국방부	여군 창설 기념 및 양성평등정책 발전행사	9.6.(화) 국방부	전 장병 및 공무원 200명	· 여군 창설일을 기념하고 군내 양성평등 유공표창
	'16년 양성평등주간 운영	7월 중	육군 전 장병	·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경연대회(7.4~7.6.) ·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7~8월)
	'16년 양성평등주간 운영	7월 중	해군 전 장병	· 양성평등 아이디어공모전 · 가족사랑 사진 콘테스트 · 양성평등업무 유공자 표창
	'16년 양성평등주간 운영	7월 중	공군 전 장병	· 인터넷 상 캠페인(팝업창, 주제영상) ·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소개책자 배부(3,000부)
법무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1~7.7	본부직원 및 서울 지방교정청 직원 700명	· 초청 강연(아버지의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 이따와 함께 하는 육아사진 공모전 · 육아나눔 우수사례 전시
통계청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발표(여가부 협업)			

□ 지방자치단체

기관명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참석대상(명)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2016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여성상 시상	7.2.(토) 09:30~10:30 광화문 중앙광장	여성상수상자, 시민 및 단체 200여명	· 기념식, 여성상 시상, 퍼포먼스 등
		7.2.(토) 09:30~15:00 광화문 중앙광장	여성단체 및 시민 3,000여명	· 여성정책 및 안전, 일자리 관련 홍보, 체험부스 등 운영
	직장맘을 위한 인문학멘토 초청강연회	7.2.(토) 10:00~13:00 청계천 박물관 강당 3층	서울시 직장맘, 여성노동관련 종사자 등	· 여성,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강연
부산광역시	2016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7.5.(화) 14:00~15:00 부산시청대강당	여성지도자, 수상자, 시민 700여명	· 부산 여성상 시상,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기관명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참석대상(명)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201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6.30.(목) 14:00 엑스코 오디토리움	단체, 시민 등 1,000명	· 기념식(유공자 표창,주제영상, 기념공연 등)
	2016여성UP 엑스포	6.30.(목)~7.2.(토) 엑스코	시장,대구고용노동청장 등 30,000명	· 취 · 창업 박람회,가족친화 포럼 등 · 150개사 380개 부스
인천광역시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7.(목) 12:30~16:3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여성단체 회원, 시민 1,000명	· 기념식, 토크콘서트(헤민스님), 양성평등디자인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여성건강축제 한마당	7.3.(일) 10:00~16:0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	시민, 단체회원, 기업체 2,000명	· 여성건강문제 상담부스, 가족유대 체험광장 운영
광주광역시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5.(화) 10:30~15:00 빛고을체육관	시장, 단체장, 시민 등 700명	· 식전행사, 유공자시상, 기념사, 식전공연, 중창노래자랑 등
대전광역시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4.(월) 14:00 시청대강당(3층)	여성단체 및 시민 700여명	· 식전행사, 기념식, 여성대회 등
	대전시민걷기 한마당	7.9.(토) 18:00 엑스포시민공원	시민 2,000여명	· 축하공연, 대전시민 걷기한마당, 시민 참여부스 등
울산광역시	2016년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7.7.(목) 15:00 시청대강당	시민 600여명	· 식전행사, 기념식, 특강 등
	양성평등 희망나눔 한마당 운영	7.4.(월)~7.8.(금)	시민 1,000명	· 취 · 창업관, 여성가족정책 홍보관 및 전시마당 운영
	토론회개최	7월 중	여성포럼 회원 등 300명	·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토론
	토크 콘서트	7.20.(수)	시민 120명	· 성희롱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상황극, 토크콘서트 진행
	양성평등인식개선을 위한 거리상담	7월 중	시민 1,500명	·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거리 홍보와 다양한 체험행사' 추진
	다시(다르다는 것에 시선 맞추기)	7.2.(토)	시민 400명	· 양성평등 교육부스 운영 및 양성평등 디자인 및 캘리그래피 전시

기관명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참석대상(명)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4.(월) 14:00	여성단체협의회원 및 주민 1,000여명	· 기념식, 표창, 특강, 공연 행사
경기도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5.(화) 14:00	도의원, 여성단체 등 500명	· 기념식, 특강, 공연행사
	토론회	6~9월 중	도의원, 여성단체 활동가, 도민 등 70명	· 여성정치 활성화를 토론회
	여성영화제 등 공연 및 캠페인	6~9월 중	도민 5000명	· 거리문화 공연, 여성영화제, 가정폭력, 성폭력예방캠페인
강원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6.28.(화) 11:00 양구체육관	여성단체 및 도민 2,000여명	· 기념식, 비전선포식, 유공자표창, 화합한마당
충청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12.(화) 10:30 청주아트홀	도민 700명	· 기념식 및 시상식, 양성평등토크콘서트
충청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 제32회 충청남도 여성대회	7.5.(화) 건양대학교 콘서트홀	여성단체, 다문화가정여성 등 1,000명	· 기념식, 특강, 화합한마당등
전라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7.(목) 14:00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도·시·군 단체대표 및 회원 등 500명	· 기념식, 유공자표창, 정책포럼, 퍼포먼스 등
전라남도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5.(화) 도청 김대중강당	양성평등 유공자 등 700명	· 양성평등주간 시상식 및 주제결의 등
경상북도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5.(화) 김천예술문화회관	여성지도자 등 1,000명	· 기념행사, 주제공연, 퍼포먼스 등
경상남도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4.(월)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	관계자, 유공자, 시민 700여명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특강(신은경), 부대행사, 홍보부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7.2.(토)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도민 400여명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유공자표창, 토크콘서트, 공연·홍보부스, 캠페인

공약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본격 추진

- **현 정부 공약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음**

* 2016. 7. 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심의 확정

- 사업 타당성이 확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약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 **동 사업은** 지난 30여년간 강원도의 핵심 숙원사업이었으나, '01년, '10년, '12년 3회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음
- **現 정부는** '13년 7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을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기획**(사업비 640억원 절감 등)하였으며,
 - 이를 바탕으로 '14. 5월부터 **4번째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되었음

※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계획**」 발표('13.7월) :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되 예타 결과 타당성 미흡사업 등은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기획**하여 추진

※ 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16.7.7일)시 **대통령 말씀** : **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처럼 수십년간 지역민들이 애타게 원하는데도 과거의 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업, 이런 대형 사업들이 관광,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 등과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

- 동 공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후속 절차인 **기본계획 수립** 등에 신속하게 착수할 계획이고, **내년에** 설계를 실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조속한 시행을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 춘천~속초 철도사업은 춘천에서부터 화천, 양구, 인제, 속초까지 93.9km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조 631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임
- 사업이 완공되면 **시속 250km급 급행열차**가 투입될 예정으로 용산역에서 속초까지 약 1시간 15분내 주파가 가능하게 되므로 수도권과 강원 북부, 동해 북부권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강원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1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개요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도권과 강원·동해권의 고속화철도 교통망을 구축하여 도로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강원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개발 촉진
- 사업내용 : 춘천~속초간 93.9km 단선전철 신설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631억원/ 8년
- 열차운영 : 시속 250km급 급행열차, 용산~춘천~속초간 36회/일 운행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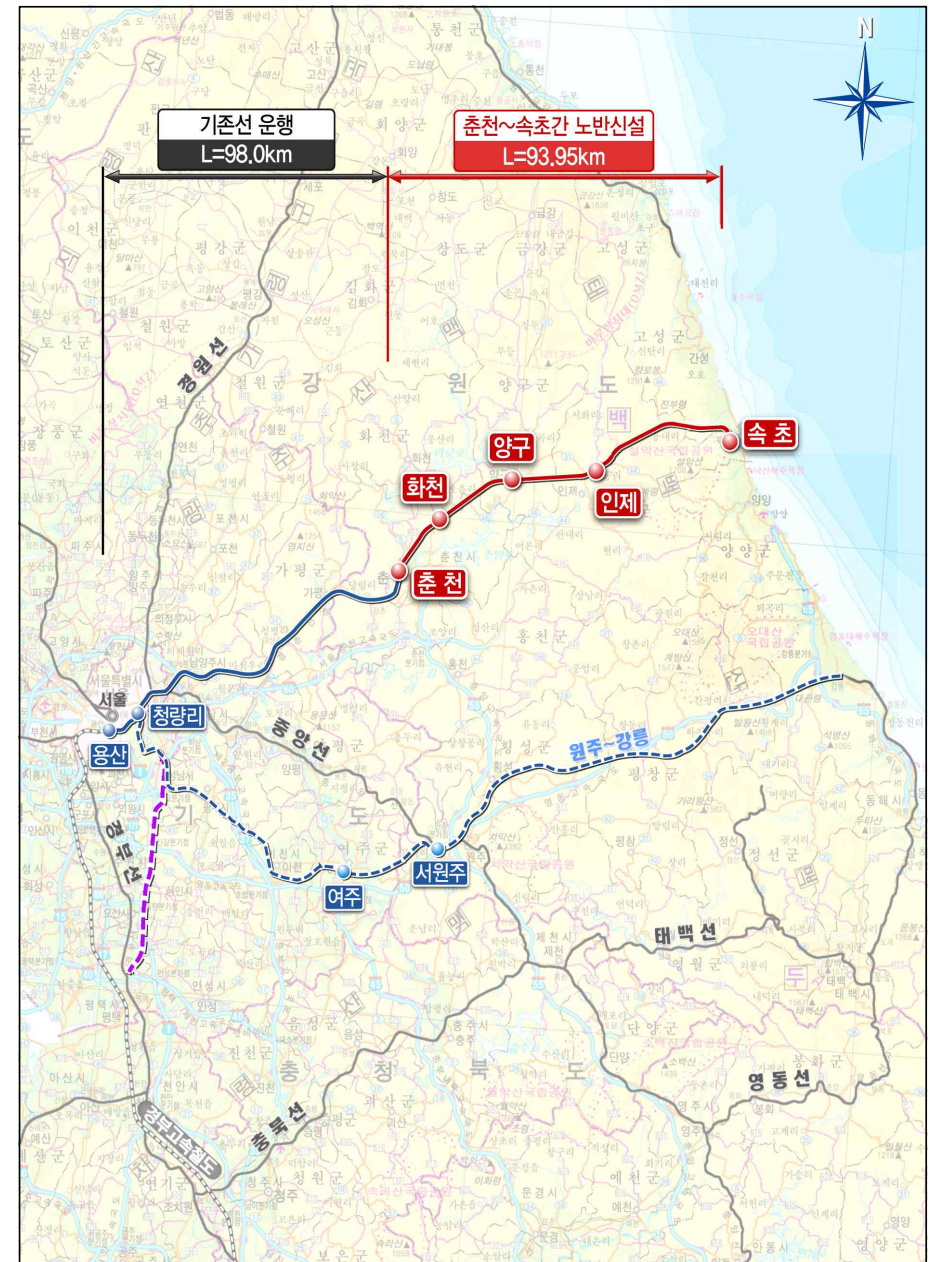
- '01년, '10년, '12년 : 예타 조사 3회 시행(B/C 0.49, 0.73, 0.67)
- '13.8~'14.12 : 춘천~속초 사업재기획 연구 시행(국토교통부)
 - * 사업비 절감 방안 적용, 주말·관광수요, 현실화된 예타기준 등을 반영하여 경제성 향상(B/C 0.83~0.97) 방안 마련
- '14.5~'16.7월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기재부, B/C 0.79, AHP²⁾=0.518)

□ 향후계획

- '16. 7월 : 기본계획 수립 예산 요구 및 배정
 - * 철도기본계획수립 예산 활용('16년 220억원 활용)
- '16. 9월 :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17. 하반기 : 기본설계 착수

2)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방법, 0.5이상이면 사업 추진

참고2 사업 노선약도



“유라시아 교통·물류, 한국에서 만나다 !”

- ASEM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 전문가그룹 회의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세계 육지면적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제 교통물류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ASEM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 전문가그룹 회의』를 '16년 7월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함께 '15년 9월 서울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ASEM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과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 박근혜 대통령이 심포지엄에서 유라시아 지역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의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전문가 그룹 회의의 개막식에는 ASEM 회원국 정부대표를 비롯하여 OECD 국제교통포럼(ITF)³⁾, TRACECA⁴⁾ 및 GTI⁵⁾ 등 국제기구 수장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또한, 전문가그룹 회의의 세부 세션은 작년 국제 심포지엄에서 ASEM 회원국의 합의로 채택된 ‘서울선언문’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 ① 한반도중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계 등 교통망 연결을 논의하기 위한 인프라 세션, ② 각국마다 상이한 통관·검역 제도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운영제도 세션, ③ 그리고 주요

사업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투자자원 세션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전문가그룹 회의는 한·중·러·몽 4개국이 공동으로 역내 교통개발 전략을 논의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교통 분과위원회와 동시에 개최되어 유사한 목적의 두 회의의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특별 세션과 외국 참석자에 대해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비무장지대(DMZ) 투어 등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전문가그룹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 내 우리나라의 주도권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 본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은 물론이고 내년 전문가그룹 회의 개최 예정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본 전문가 그룹 운영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57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OECD 산하 교통분야 국제기구
 4) 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14개 회원국을 주축으로 EU와 아시아 간 교통회랑 구축을 추진하는 국제기구
 5) Greater Tumen Initiative: 한·러·중·몽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협의체

참고 1 전문가그룹 회의 행사개요 및 전체 프로그램

□ 행사개요

- (일 정) '16. 7. 11(月)~13(水) (2일 전문가그룹 회의, 1일 DMZ 현장견학)
- (장 소) 서울 롯데호텔 (소공동)
- (참석자) ASEM 회원국 전문가(정부, 학계, 산업계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
- (주 제) 유라시아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통관·검역 규제완화, 투자재원 마련 방안
-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연구원

□ 프로그램 구성

시간	7.11(월)	7.12(화)		7.13(수)
08:00-09:00				DMZ 시찰 * 외국인 참가자 대상 (08:00 -15:00)
09:00-10:00		운영제도 세션 (09:30-11:00)	재원 세션 (09:30-11:00)	
10:00-11:00	개회식 및 기조 세션 (10:00-11:00)	휴식		
11:00-12:00	휴식	폐회식 (11:20-12:00)		
12:00-13:00	인프라 세션 I (11:20-12:40)	오찬 (12:00-13:30)		
13:00-14:00	오찬 (12:40-14:00)			
14:00-15:00	인프라 세션 II (14:00-15:30)	제6차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교통분과위원회 회의 (14:00-18:00)		
15:00-16:00	휴식			
16:00-17:00	특별 세션 (15:50-17:00)			
17:00-18:00				
18:00-19:00	환영 만찬 (18:00-20:00)			
19:00-20:30				

참고 2 '15년 유라시아 심포지엄 「서울선언문」 주요내용

□ 배경

- 한국의 주도로 개최되는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ASEM 회원국의 대표(35개국)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합의
- * 이번 유라시아 국제심포지엄은 '14. 10월 제10차 ASEM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하여 결과보고서에 채택, 개최 결정

□ 합의 주요내용

- 아시아-유럽 간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물류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강화
- 아시아-유럽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규모에 맞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 강구
- 보안 등 교통 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처 강화 및 국경에서의 검역·세관 절차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 아시아-유럽 간 교통수단 연계 강화를 위해 “유라시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방안 논의 추진
 - 전문가포럼은 ASEM 체제 하에 회원국의 고위급 회의와 교통수단 (인프라), 통관제도, 투자재원 등 3개분야의 전문가그룹으로 구성
 - 전문가포럼은 관련 국제기구(UNESCAP, UNECE, OSJD, IRU 등) 및 기존의 ASEM 실무그룹과 긴밀히 협력 추진
 - 전문가포럼은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ASEM 교통장관회의가 개최(격년)되는 해에는 해당국가에서 동시개최
 - '16년 1차 전문가포럼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고, ASEM 교통장관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는 ASEM 조정국을 통해 개최지 결정

12 해양수산부

농수산물식품 창업 스타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 시작 - 최종 828팀 참가, 예선 경쟁률 17.6:1, 7.15일부터 지역예선 실시 -

《 주 요 내 용 》

□ 「농수산물식품 창업 콘테스트」 최종 828팀 참가

- 지역별로는 서울(219건, 26.4%)이, 분야별로는 가공식품(289건, 34.9%)이, 연령별로는 30대(233건, 28.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접수현황은 전반적으로 작년과 유사하나, 최근 4차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ICT/BT(15.6→18.6%) 및 농기자재 분야(8.2→11.2%)의 참가비중이 증가한 점이 특징적

□ 향후 진행일정

- (지역별 예선, 47팀 선발) 7.15~8.11.(서류심사: 7.22까지 / 발표평가: 8.11까지)

	서울	부산	인천	세종	강원	충북	대전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심사	89~10	8.10	8.2	8.9	8.3	8.8	8.5	8.9	8.3	8.2	8.4	8.5
선발 팀수	9	5	3	2	2	2	2	3	5	4	5	5

- (본선 설명회) 전국본선 진행방식 안내 등(8월 4째주, 안성 팜랜드)
- (본선·결선) 본선(9월 2째주)에서 10팀을 선발, 최종 결선(10월 3째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수산물식품 창업 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 접수가 지난 13일자로 성황리에 마감됨에 따라, 최종우승을 위한 참가자들의 본격적인 아이디어 경쟁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5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이 진행된 이번 콘테스트는 농수산물식품 분야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총 828건이 접수됨에 따라 17.6:1의 높은 예선경쟁률을 기록했다.

- 지역별로는 서울(서울·경기, 26.4%), 전남(전남·제주, 11.0%), 경북(10.4%) 순으로 많은 참가자가 신청하였다.

구분	전체	서울	부산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전수 (%)	828	219 (26.4)	77 (9.3)	43 (5.2)	24 (2.9)	41 (5.0)	31 (3.7)
		대전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26 (3.1)	45 (5.4)	86 (10.4)	69 (8.3)	76 (9.2)	91 (11.0)

- 분야별로는 가공식품(33.8%)과 ICT/BT(17.8%) 부문의 아이템에 가장 많은 참가자가 몰렸다.
- 특히 작년에 비해 ICT/BT(15.6→18.6%)의 참가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수산물분야 첨단기술 수요 증가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6차 산업화	ICT/BT	서비스	농산물	가공 식품	농수산 기자재	중소 기업	관광 상품	수산	기타	계
전수 (비중)	92 (11.1)	147 (17.8)	14 (1.7)	36 (4.3)	280 (33.8)	91 (11.0)	2 (0.2)	8 (1.0)	102 (12.3)	56 (6.8)	828

- 연령별로는 30대의 참여비중(28.1%)이 가장 높았으며, 40대(22.8%)와 20대(20.1%), 50대(18.6%) 등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참여하였다.

- 작년에 비해 20~30대의 참가비중이 증가(43.6→48.2%)하였는데 청년창업 열풍이 젊은층의 창업콘테스트 참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수 (비중)	5 (0.6)	166 (20.1)	233 (28.1)	189 (22.8)	154 (18.6)	81 (9.8)

- 향후 진행되는 예선에서는 참가자가 선택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47팀이 선발되며, 이들에게는 전국 본선 진출 기회와 1백만 원의 상금이 제공된다.

* 서울,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 예선 심사일정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1차 서류심사 통과자(선발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2차 발표평가(PPT, 질의응답)를 실시한다.

* 지역별 예선 : 7.15.~8.10.(1차 서류심사 : 7.22.까지 / 2차 발표평가 : 8.11.까지)

	서울	부산	인천	세종	강원	충북	대전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발표 평가	8.9 ~10	8.10	8.2	8.9	8.3	8.8	8.5	8.9	8.3	8.2	8.4	8.5
선발 팀수	9	5	3	2	2	2	2	3	5	4	5	5

* 평가일정은 혁신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는 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www.a-creativ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역 혁신센터별로 개별 통보도 할 계획이다.
-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47팀)는 지역 혁신센터별 1:1 멘토링을 통해 본선과 최종결선에 참여하게 된다.
- 전국 본선은 9월 둘째주에 2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본선을 통해 선발된 10개팀은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최종결선에 진출하게 된다.
- 자세한 사항은 8월 마지막 주 안성팜랜드에서 열리는 ‘본선 참가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해수부와 농식품부 관계정책관은 “접수된 아이디어 중 사업성이 크고 참신한 유망 아이템이 작년보다 더 늘었다”며 “이번 창업콘테스트를 통해 앞으로도 농수산물 분야 창업 붐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향후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KBS와 함께 콘테스트 전 과정을 TV 프로그램으로 제작(9.25~11.6, 매주 일요일 13:20)하여, 농수산물 품 분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소개할 계획이다.